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발전 전략

2025. 8.

경 상 북 도
박 현 정

|| 목 차 ||

I. 서론	5
II. 국내 고령 인구 및 환경	7
III.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	13
IV. 그간의 정부대응	30
V. 시사점	32
VI.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35
- 주요국(미국 · 일본 · 중국) 현황	51
- 캐나다 시장현황	63
VII. 경상북도 대응 방안	80
VIII. 결론	114

I. 서론

- 2024년 말 대한민국 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은 19.2%에 해당하는 994만 명으로 집계됨. 노인 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국내 인구의 20.6%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더 나아가 2035년에는 30% 수준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2030년까지 유럽과 북미처럼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최소 4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파른 변동률을 보이고 있음. 국제사회가 고령화 현상에 이토록 각별히 대처하는 까닭은, 2000년에 약 6억명 수준이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년 만에 약 20억 명으로 세 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산
- 국내에서 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여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지됨.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를 먼저 겪었던 다른 국가들처럼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노동의 질적 하락, 저축·투자·소비의 위축 등 경제 활력 저하, 나아가 성장 동력 약화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노령층 비율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고령화 비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 부양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이처럼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 그로 인한 소비 및 저축 감소,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비 증대와 같은 난관을 초래할 수 있음
 - 하지만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생활 방식의 다변화로 이어져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님. 이는 곧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갖춘 뉴시니어 세대가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고령친화 용품 및 서비스는 물론,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하고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인 미국의 고령친화 산업은 2025년경 약 3조 5천억원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8천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 고령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30%가 고령층에 해당되며,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소비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 2030년에는 4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됨
-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2001년에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이후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4%까지 상승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음. 2035년경에는 20% 수준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고령화에 맞춰 유망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와 국내외 고령화 흐름, 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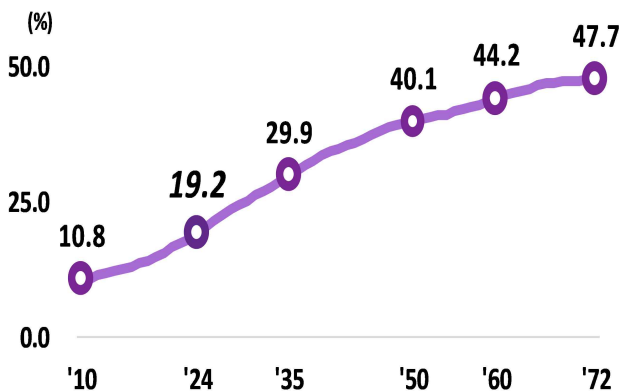
Ⅱ. 국내 고령 인구 및 환경

1 인구 통계

□ 인구 및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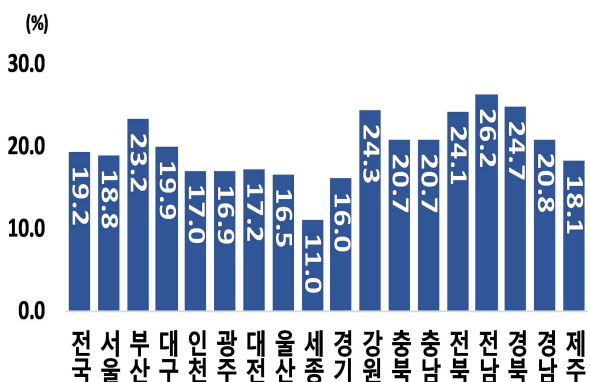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993만 8천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줌
- 2024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국내 총인구의 19.2%이며, 이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를 예고함
- 2024년 고령 인구 비중은 여성이 21.5%, 남성이 17.0%로 여성이 남성보다 4.5%p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여성의 긴 평균 수명과 연관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함
- 2024년 기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전남이 26.2%로 가장 높고, 이어 경북 24.7%, 강원 24.3%, 전북 24.1%, 부산 23.2%, 경남 20.8%, 충북 20.7%, 충남 20.7% 순으로 나타남. 이는 특정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를 나타내며, 지역별 맞춤형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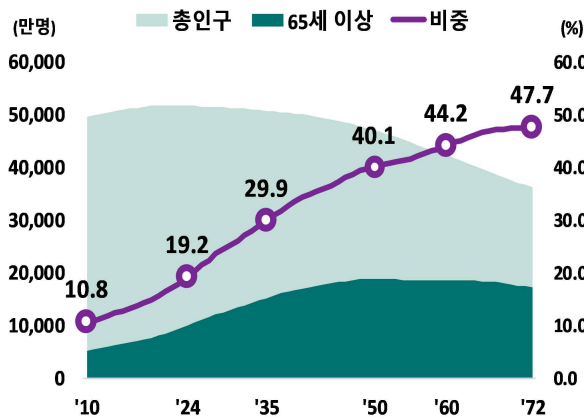
2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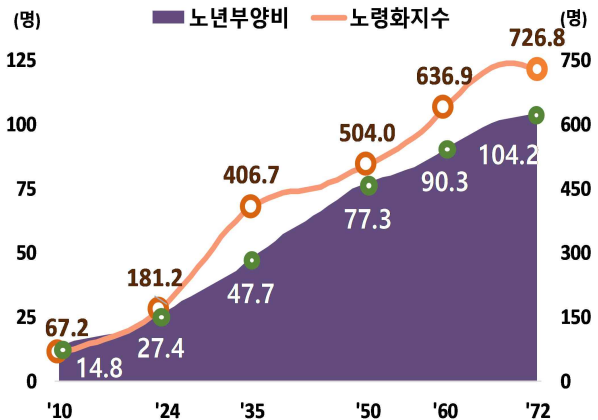
□ 고령인구

-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93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함.
- 이 비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36년에는 30%을 상회하고,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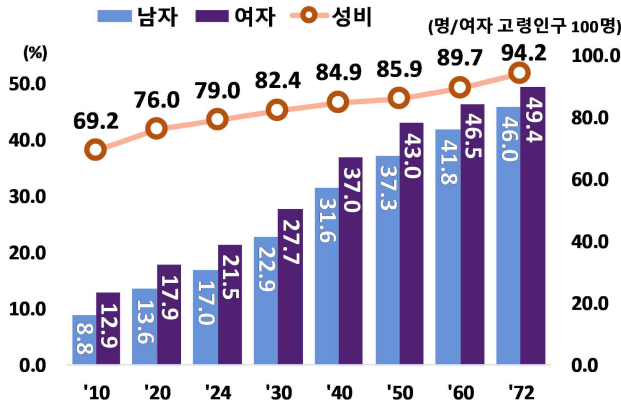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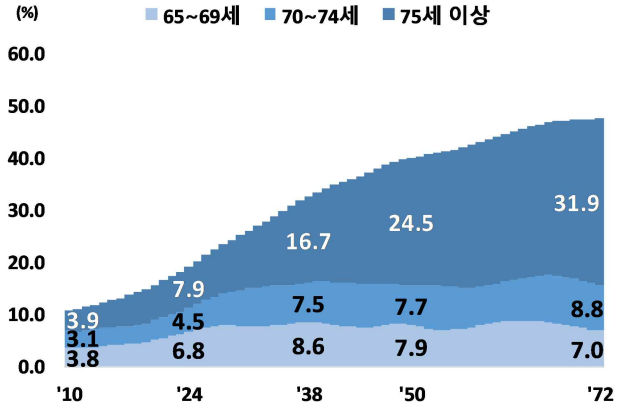
□ 성별·연령대별 고령인구

- 2024년 성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여성은 21.5%, 남성은 17%로 여성이 남성보다 4.5% 포인트가 높음.
- 65세 이상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수는 2024년 7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50년 85.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는 6.8%, 70~74세 4.5%, 75세 이상 7.9%를 차지함.
- 2024년에는 65~74세 인구가 583만 2천명으로 75세 이상 인구 410만 6천 명 보다 많으나, 2038년 이후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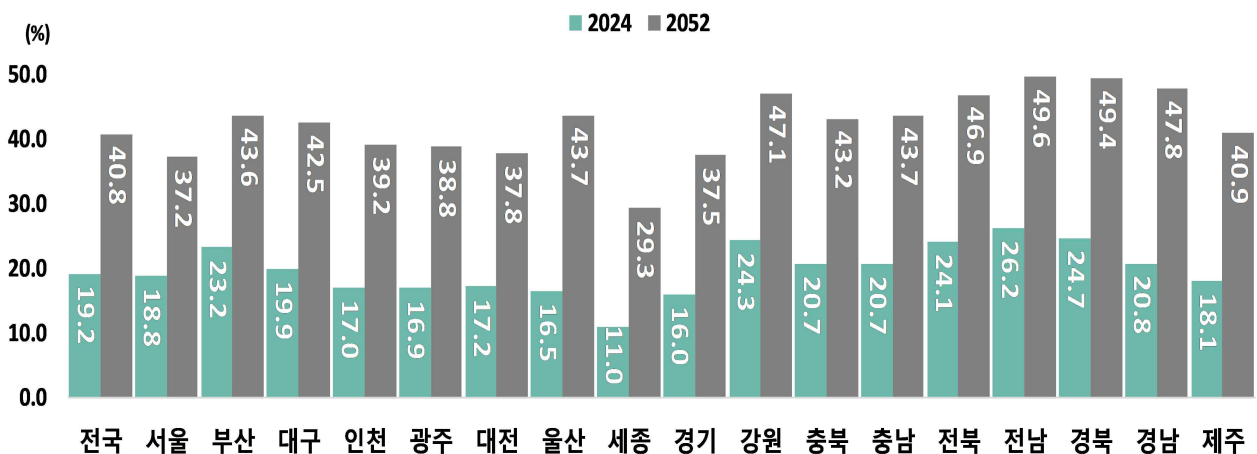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지역별 고령인구

- 202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은 전라남도 (26.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11%)로 나타남
- 같은 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지역은 전남 26.2%를 비롯하여, 경북 24.7%, 강원 24.3%, 전북 24.1%, 부산 23.2%, 경남 20.8%, 충북 20.7%, 충남 20.7% 등 총 8개 지역임.
- 2028년에는 세종(13.5%)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38년에는 세종 역시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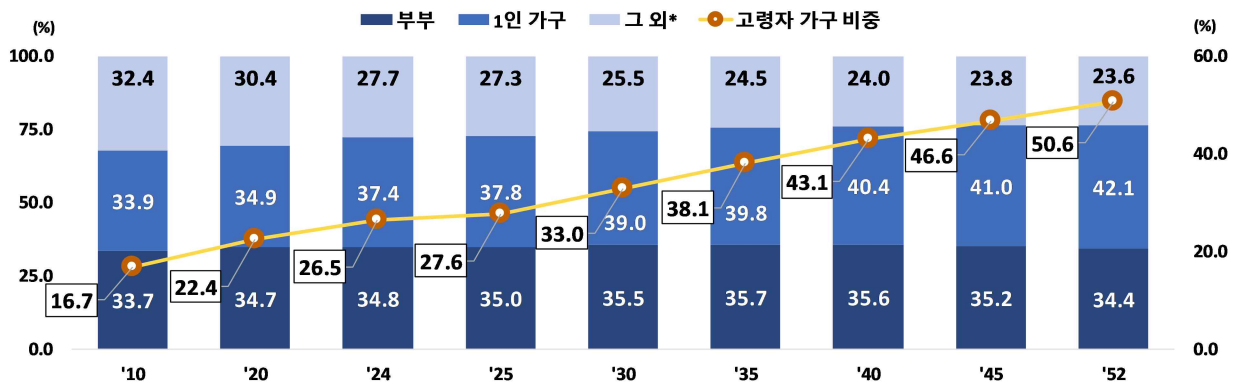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고령자 가구

- 2024년 기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86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5%를 차지함.
- 같은 해 가구 유형별 비중을 보면, 1인 가구가 37.4%로 가장 많고, 이어 부부 가구 34.8%,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9.2%, 부모와 미혼 자녀 가구 5.6% 순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8년에는 1천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5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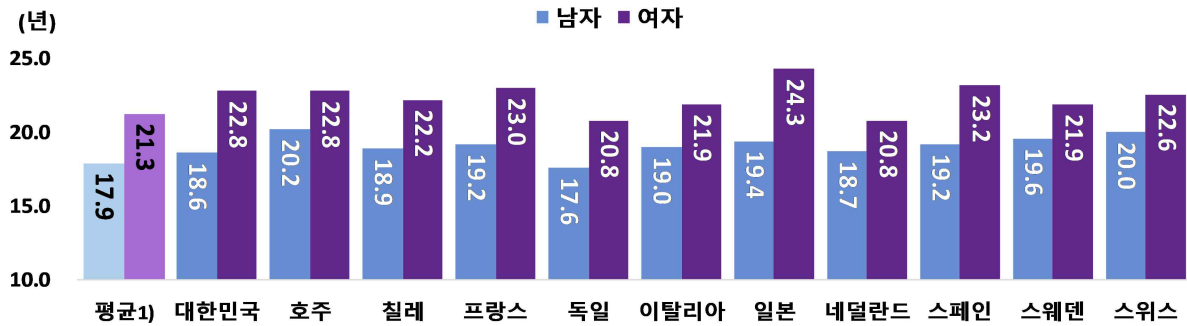
* 그 외: 부부+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기타

3 건강

□ 기대 수명(기대여명)

- 2022년 65세의 기대수명은 20.7년, 75세의 기대수명은 12.6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년씩 줄어들음
- 65세 여자(22.8년)의 기대수명은 남자(18.6년)보다 4.1년 더 길고, 75세 여자(14.0년)의 기대수명은 남자(11.0년)보다 2.9년 더 길었음
- 2022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1.5년 높으며, 남자는 0.7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수명(65세,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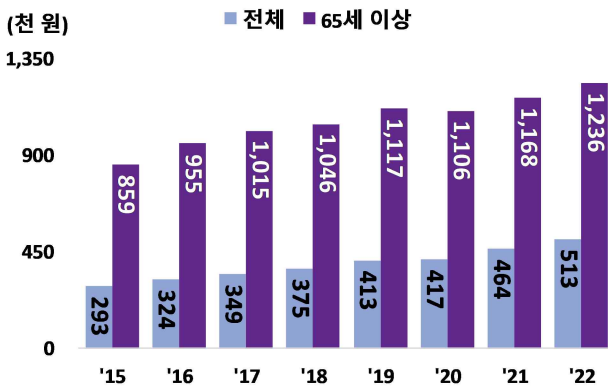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4.9.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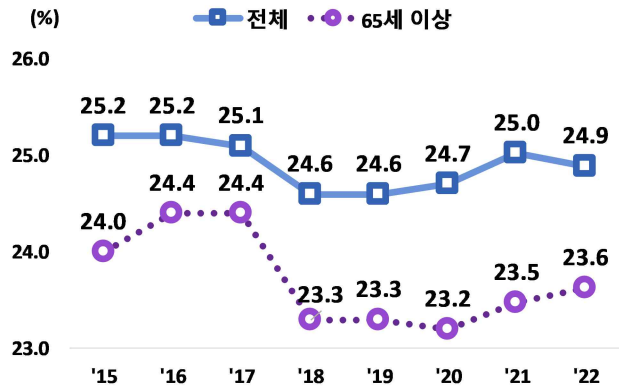
□ 의료비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22만 9천 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123만 6천 원으로 집계
-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각 25만 6천 원, 6만 8천 원 증가함
-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23.6%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상승함
- 연령대별로 보면, 65~74세 고령자의 1인당 본인 부담금은 10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2천 원 상승하였고, 75세 이상은 15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만 9천 원 늘어남

<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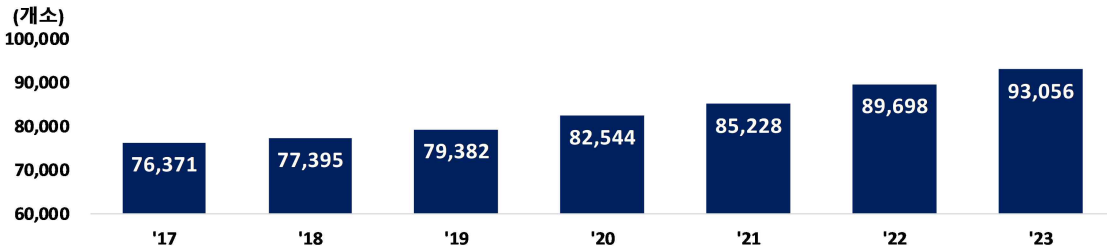
4

복지시설

□ 시설 수

- 2023년 기준 노인 복지시설은 93,056개소로, 전년보다 3.7% 증가함
-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5,896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24개소로 19.8% 증가함.
-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23년 297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보다 3.6% 감소함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5

소득

□ 자산현황

- 2023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4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원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 순자산 4억 3,540만 원보다 2,000만 원 높은 수준임
- 고령자 가구의 자산 구성에서는 부동산이 8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 비중은 12.9%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임.

Ⅲ.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 (목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의미
 - 고령친화 제품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수요자로 하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 됨
 - 고령자의 건강, 편익, 안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이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목적)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삶의 수준 향상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률상 용어)
 -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종
 - 고령친화사업자 :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관계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 고령친화산업을 14개 부문과 34개 품목으로 구분

- 주요 분야로는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농업 등이 포함

구분	주요내용
1. 요양 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2. 의료 기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재활 기기
3. 정보 기술	헬스케어 앱, 원격 의료 서비스
4. 여가 및 문화	관광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5. 금융 서비스	노인 맞춤형 금융 상품, 보험 서비스
6. 주거 시설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노인 주거 단지
7. 농업	도시 농업 프로그램, 농작물 재배 지원 서비스
8. 식품	건강식품, 노인 맞춤형 식사 서비스
9. 교통	고령자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10. 교육 및 훈련	노인 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서비스
11. 안전 및 보안	고령자 안전 기기, 주거 안전 시스템
12. 가사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청소 및 정리 서비스
13.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14. 연구 및 개발	고령자 관련 연구, 새로운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 특 징

특징	설명
산업적 특성	다품종 소량생산, 범위 및 연결의 경제성 추구
소비자적 특성	고령층의 안전과 권익 보장 중요

-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중요
-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노화 과정에 동반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아우르며, 단순한 생산 규모 증대에 따른 효율성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계성과 상호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
-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전과 권익 보장이 중요하며,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지님
- 고령친화산업은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수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지님
- 건강, 사회적 활동,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그분들의 안전과 권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
 -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시장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대상 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채롭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다수의 세분

화된 소규모 시장들이 모여 이루어진 형태

- 이러한 특성상, 제한된 품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에 유리한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소량으로 생산하는 체계에 더 적합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구조
 - ▶ 국내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
- 단순히 생산량을 늘려 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효율성'보다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범위 및 연결의 효율성'을 지향해야 하므로, 다양한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기반의 산업 집적단지(클러스터) 형태가 훨씬 유용
 - ▶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 고령 사회 도래가 갖는 의미

-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가져올 여파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선진국 대비 재정적 여력, 사회복지 시스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모두 취약한 실정이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
 - 시장측면에서는 고령 소비자 수는 충분하지만, 소비 질적 특성은 불확실하여 수요 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공급기반을 구축해야함.
-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생산 활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 지난 50년 동안 인구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로, 약 1천만 명의 규모의 최대 단일 소비 주도층으로 자리매김.
 -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 산업의 번영을 이끌었던 세대

-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그리고 구매력을 지녔으며, 노후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
-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 함께 적은 수의 자녀를 두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홀로 거주하는 고령층 가구의 증가
-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이 매우 강하며, 스스로를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
- 정보통신의 혜택을 받은세대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

4 고령친화산업 필요성

□ 기회 및 위협 요인

구분	내용
위협	건강, 재무, 생활 위험 증가
기회	고령 인구의 새로운 수요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

○ 고령화 시대의 양면성 ▶ 도전과 기회

-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단순히 위협 요인만으로 볼 수 없으며 여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주요 위협 요인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 가중과 경제 성장을 둔화가 지목되며, 고령층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 재무적 안정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요소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하지만, 이러한 고령화는 한편으로 거대한 고령 인구의 새로운 수요를 고령친화산업과 점목시켜, 이를 우리나라 미래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한 계

- 정부는 고령 인구의 건강, 재무, 생활 위험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공익 서비스의 질과 양에는 한계 존재

□ **추진방향**

- 경제적 여유를 지닌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야 함
-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성장률 저하와 정부 재정의 부담 증대에 대비하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새로운 요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해법이 절실히 요구됨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해당 산업의 주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

□ **활성화 비전 및 목표**

- 활성화 방향
 - 국제 경쟁력 확보
 - 시장성장율, 시장점유율, 공공성 등 제고
- 활성화 목표
 -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
 - 이 과정에서 고령세대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 요소를 해소하며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비전	실버를 돈이 되는 골드산업으로				
3대 방향	국제경쟁력 확보		시장매력도 제고		공공성 제고
5대 정책 목표	차세대 성장동력화		삶의 질 제고		
	재정위험 감소	저성장 위험감소	건강위험 감소	재무위험 감소	생활위험 감소
4대 전략	선택과 집중	단계적 추진	특별법 제정		범 정부적 추진체계구성

□ 개념

- 실버 경제라는 개념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의미
 -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경제 활동, 제품, 서비스 등 모든 활동
 - 70년대 고령자 시장을 지칭하기 위해 일본에서 유래된 이른바 실버마켓(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건강, 은행, 자동차, 에너지, 주택, 통신, 레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집약
- 실버 경제는 노인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경제 활동의 총체, 단순히 노인 인구의 경제적 활동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소비재의 관점에서 식품, 개인용품, 교통 및 통신비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생활비와 의료,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 소비가 노인층의 핵심 소비 영역
 -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산업의 관점에서 실버 경제는 주로 가사 서비스, 의료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며 간호 등 여러 노인 돌봄 서비스 세분화 산업과 시장도 성숙되어 가는 추세
 - 금융산업 관점에서 노인들이 위험에 대한 충격을 대처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이 증가하는 추세
- 실버경제는 통상 “Silver Economy”라고 지칭
 - Silver Economy는 노인 및 고령 인구의 구매력을 활용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포함

- Silver Economy의 주요 요소

- (노인 소비 시장) 노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건강 관리, 여행, 여가 활동 등으로 다양
- (기술 활용) 스마트 홈 기술, 헬스케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노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

- 단순히 노인 인구의 경제적 활동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주도권 이동

- 실버 소비자의 총 소비 규모가 아시아, 북미, 유럽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의 실버 경제 지출이 2030년까지 2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련분야

○ 고령화 사회

-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

○ 노인 소비 시장

- 노인들이 선호하는 상품과 서비스, 예를 들어 건강 관리, 여행, 여가 활동, 주거 서비스 등이 포함, 시장은 노인의 생활 수준과 요구에 맞춰 발전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
- 재취업, 자원봉사,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사회적 서비스

-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
- 사회적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과 혁신

- 실버경제는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
- 스마트 홈 기술, 헬스케어 기술 등이 노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

< 관련 용어 >

- ❖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실버 산업, 시니어산업으로도 표현
- ❖ (국외)
 - 실버경제 :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50세 이상 고령층을 소비자이자 근로자로 간주
 - 장수 경제 :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50세 이상 노인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만드는 경제 활동을 의미
 - * 미국은 실버시장(Silver Market) 보다는 'Longevity Economy' , 'ElderlyMarket', 'OlderConsumer', 'SeniorMarket', 'Beyond 50' 등 으로 명시
 - 중국에서는 '은발경제', '노령산업', '양로산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 됨
- ❖ (기타)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증가, 실버산업 발전 촉진 요인
 - 홈케어 서비스 : 자택에서 노인 생활 지원 간호, 요양, 가사 서비스 포함
 - 노인복지 : 노인 생활 향상 및 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실버산업의 중요한 부분
 - 실버 테크놀로지 : 노인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스마트 홈 기기, 헬스케어 기기 포함노인의 자립적 생활 지원

□ 실버경제 현황 및 트렌드

-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로 실버경제 시장이 첨단기술과 결합된 Age-Tech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액티브시니어 >

- ❖ 정의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
- ❖ 특징 :
 - 건강 관리 :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
 - 사회적 참여 : 자원봉사, 동호회, 여행 등 다양한 활동 참여
 - 지속적인 학습 :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 욕구,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자기 표현 : 예술, 음악, 글쓰기 등으로 감정과 생각 표현
- ❖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로 간주

< Age-Tech >

- ❖ Age-Tech는 노인 인구를 위한 기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 포함
- ❖ 주요 요소
 - 기술의 종류 : 인공지능, 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홈 기술 등
 - 목적: 노인의 건강 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독립적인 생활 지원
 - 응용 분야 : 의료, 안전, 커뮤니케이션, 여가 등
 -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
- ❖ Age-Tech의 주요 특징
 - 건강 관리 : 원격 진료,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 상태 관리
 - 사회적 상호작용 : 소셜 미디어, 비디오 통화 등으로 사회와 연결 지원
 - 안전 및 보안 :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제공
 - 지속적인 학습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 지원
 - 노인의 독립성 증진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 지원
 -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음

□ 확대될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구매력

○ 인구 구조 변화

- 인구 감소 : 2020년부터 한국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무게 중심이 시니어 계층으로 이동하고 있음

○ 소비 특성

- 소비 중심 : 액티브 시니어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소비에 적극적이며, 이는 과거의 고령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반영함

○ 소비 패턴

- 55~69세의 소비자는 젊은 소비 계층(25~39세)의 85% 수준의 소비를 하며, 특히 식품, 여가,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증가가 두드러짐

○ 시장의 성장

- 향후 전망 : 2029년에는 55~69세가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소비 규모는 2057년까지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증가 요인 : 액티브 시니어 시장의 성장은 경제적 여유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나타나며, 소비 성향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 마케팅 전략

- 맞춤형 접근 :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주도적 소비를 선호하며, 이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젊은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을 통해 미래의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전 망

- 액티브 시니어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들을 이해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젊은 세대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 구축 필요

□ 실버경제의 Age-Tech화

- **(발전동향)** 최근, 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실버경제의 고령자 관련 제품·서비스가 첨단기술 기반의 Age-Tech로 고도화
- **(해외시장)** 글로벌 Age-Tech 산업 규모*는 연평균 23% 성장해 '22년 1.9조달러(약 2,755조원) → '25년 3.2조 달러(약 4,600조원)으로 성장 전망 (세계경제의 8%이상을 차지할 블루오션으로 부상)

* 고령층 지출에서 식비, 주거비, 교통비, 여가·관광 및 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지출 등은 실버경제 및 Age-Tech와 관련성이 적어 제외

세계 Age-Tech 전망



* 자료: aging analytics agency(2022)

Age-Tech 개요도



* 자료: aging analytics agency(2022)

- **(국내시장)**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대응 전략 중 에이지테크를 핵심 방안으로 채택하고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대 핵심정책과제 (24.7) :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요양·의료·돌봄 체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로봇 및 AI 등 에이지테크 활용

○ (기술동향)

-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년 72조원 → '30년 168조원 전망되며 고령사회 대응 산업의 성장속에서 에이지테크는 핵심분야로 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
- 에이지테크는 현재 세가지 분야,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 돌봄지원 기술, 사람중심의 기술수용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

IV. 그간의 정부 대응

1 복지중심의 전통적 관점 지속

□ 그 간

- 고령인구 특성 변화 및 실버경제의 중요성 증가에도 실버경제 정책은 복지·재정지원 관점의 부처별 분절된 대응이 지속

□ 실버경제를 복지사업의 보완재로 인식하여 산업발전 투자 미흡

-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대체로 시혜적 성격,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편
- 이러한 '복지·돌봄' 정책이 우선하는 여건 하에서 집중적·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
- * 현재 추진 중인 Age-Tech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 R&D의 연 평균 투자액은 약 3,909.7억원으로 추정('25년도 R&D 투자액 29조 6천억원의 1.3% 수준)

□ 공공재원에 주로 의존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장

-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업, 1:多서비스가 가능한 IT·금융·교육 등 서비스에 비해 국내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으로 운영
- * 고령층 돌봄서비스 사업(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등)은 돌봄인력 파견 내용이 대다수
- 돌봄 등 사회서비스 사업자도 복지급여 등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기 곤란*한 구조
- *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업체 3,500개 조사결과: 59.4%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 54.4%가 개인사업자, 94%가 기초자치단체 단위 운영 중('22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24.3))

2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부족

□ 각종 규제 중심의 산업환경 지속

- Age-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펀드 등 정부 투자 및 지원에 사각지대 존재

- 첨단 의료기기·서비스 및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활용 관련 규제 등 민간기업의 투자와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지속

* (규제 예시) 노인성질환 치료제의 임상관련 규제, 디지털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개인정보 규제 등

- 유망 Age-Tech에 대한 산업범위 설정 등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로 과편화된 R&D 투자가 진행

* Age-Tech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부재

□ 상용화를 위한 실증 인프라 및 초기수요 창출 노력이 부족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간 융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곤란

- 첨단의료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이고, 돌봄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및 자금지원 부족

* 사례 :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강원, 충북), 치매 치료 실증 클러스터(광주) 등

- 기업이 제품·서비스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초기 수요 확보 및 판로 개척 등 정부의 노력이 미흡

□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선도·일류기업 부재

- 고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대부분 영세하여, 국내외 시장 및 산업군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도기업 부재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 전체 기업의 60.9%가 연매출 5억원 미만, 5~10억원 12.6%이고, 제조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자 수 11.0명(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

3

범정부적 역량 결집 부족

□ 범정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미흡

-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하는 고령친화산업 특성상 관계부처*의 체계적 협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반이 부족

* 복지부(제도·수요층), 산업부(산업육성), 과기부(기초연구), 중기부(중소기업 육성), 농식품부(고령친화식품), 금융위(보험·금융), 문체부(여가·관광) 등

V. 시사점

1 고령화사회의 건강관리

○ 신체적 건강 유지 욕구

-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층의 주요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려는 강한 열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러한 건강 유지의 필요성은 55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 전반에 걸쳐 건강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반증함
- 특히,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료비용 증가

- 고령자의 유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질병 치료 및 돌봄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정부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강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
- 자가 건강관리를 확산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강관리 산업 기반을 구축 필요

2

민간소비 주체로서의 고령층 부상

□ 소비 변화 예상

○ 고령자의 소비 주체화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는 앞으로 민간 소비의 주요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고령자의 소비가 전체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
-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중 고령자(60세 이상)가 가구주인 비중은 28.7%를 기록했으나, 2045년에는 이 수치가 57.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소비 패턴 변화

- 고령자 가구주의 비중 변화는 전체 민간 소비에서 고령자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을 의미
- 보건, 식료품, 주거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교육 부문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

○ 다양한 욕구의 형성

-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체적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 활동 참여,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욕구 발생
- 고령자 가구주의 증가와 함께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 기반 형성의 주요 요인이 될 것

3

고부가가치화

□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

○ 복지 중심의 발전

- 현재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복지 지원에 주로 집중
- 가격 경쟁력에 중점을 두는 산업 특성상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
- 복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복지 중심의 접근은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 지원 외의 다양한 수익 모델이 필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임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고성능 및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 기술 혁신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협력이 필요
-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VI.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 전망

1. 국내시장

1 시장규모

-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22년 82.7조원(570.3억 달러) → '26년 106.1조원(731.7억 달러)으로 연평균 5.8% 증가 추정

* '22년 총 82.7조원 중 제품 24.5조원(29.6%), 서비스 58.2조원(70.4%)으로 추산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정부 정책 방향

□ 추진체계

- (총괄)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총괄하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흥정책 수립 및 조정
- (정책조정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총괄 및 부처간 정책조정 및 기본계획 심의 등 추진
- (부처협력) 산업통상자원부(R&D 및 산업기반 조성, 제품 실증 및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 (중간지원조직)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실증·인증지원, 산업정보 제공, 제품기획 및 시장출시등의 전과정을 컨설팅
- (실증및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목적)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R&D, 기업 지원, 기술 이전, 인증 등
- (운영) 복지부, 산업부, 지자체 등
- (기능) 기술지원, 제품화,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복지부 지정, 2008) :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 및 정책연구, 헬스케어 융합 제품 R&D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산업부 지정, 2008) :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표준화 기반 구축, 산업체 대상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광주시/산단 중심) :
시제품 테스트 공간 제공, 스마트 낙상예방, 생애체험 시뮬레이터 등 체험 가능

□ 정책기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발맞춰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제정하였으며, 이법을 근거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06, 2010)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2006)되어 실질적 고령친화산업 지원 육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후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정책방향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 (2021~2025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 ①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확대
 - 병원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
 -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
 -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로 고령자의

- 일상 건강을 관리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 등 공공자원을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관리 강화)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주요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정기 검진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자가 건강관리 교육 도입
- (치매 관리체계 고도화)
 -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기진단, 상담, 가족 지원 기능 확대
 -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국공립 및 민간 위탁 형태 포함), 지역별 수요 기반 인프라 재배치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방문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② 스마트 돌봄-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및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확산을 통한 고령자의 건강관리 효율성 및 돌봄 접근성 제고
- (ICT 기반 돌봄 로봇 기술)
 - 돌봄 로봇, 비접촉식 모니터링 센서, 낙상 감지 시스템 등 고령자 안전 감시 기기 확대 보급
 - 실시간 응급알림 시스템과 24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연계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지원 및 교육)
 - 웨어러블 기기(혈압계, 혈당측정기, 스마트워치 등) 보급과 사용 교육 지원
 - 디지털 취약 고령층 대상 ‘디지털 헬퍼’ 제도 도입 (1:1 지원)
- (AI 기반 건강관리 앱 개발 및 원격의료 시범 운영)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앱 개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③ 고령친화산업(Age-Tech) 육성 및 디지털 돌봄 확산

- 고령자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및 산업 다각화 모색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인증 제도 운영)
 -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친화인증(KS 표준 기반) 제도를 확대
 - 기업의 고령자 전용 서비스 및 기기 개발 유인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 마련
- (Age-Tech 관련 연구개발)
 - IoT 기반 스마트 홈 기술, 인공지능 돌봄 솔루션, 약물 복용 알림 기술 등 고령자 친화형 기술 연구개발 지원
 - 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체제 확립을 통해 기술 상용화 및 해외 수출 촉진
 - 지자체 중심 실증단지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등으로 민간 기술 도입

④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가 자립적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Aging in Place’ 를 실현
- (케어 안심주택 및 Barrier-Free(BF) 주택 확대)
 - 욕실·주방 안전설비, 휠체어 접근성 보장 구조 등 고령자 맞춤형 개조 지원
 - 공공주택단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주거+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주거, 돌봄 연계 모델 구축)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한 복합 거주지 조성
 -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 통한 공급 기반 확보

⑤ 다층적 소득 및 주거 안정

- 노후의 소득 단절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주거 확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
- (공공 소득보장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및 급여 인상 검토
 -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유형 신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 고령자 밀집 지역 중심으로 교통·의료 인프라 연계된 복합 단지 조성
- (주거 안정성 강화)
 - 고령자 보호구역 설정(보행자 안전 강화), 주택 내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3

지자체별 기본 내용

□ 시도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 고령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
- 투자 규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화 분야에 총 879억 원을 투입하여 잠재 인력의 활용과 교육 부문을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노인복지정책(2022) :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 확충, 9988 서울프로젝트, 실버극장 확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추진중
- '9988 서울 프로젝트' (2025년 현재) : 2026-2030년 5년간 총 32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일자리·주거·환경/문화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 돌봄 : 실버 데이케어센터 확충(2040년까지 85곳 목표), 통합돌봄 창구 2030년까지 1,000곳 설치,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2021년 18개 → 2025년 26개)이 포함됨. 이는 고령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 일자리 :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일자리 2040년까지 30만 개 발굴,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인 시니어 인력뱅크 운영으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함
 - 주거 :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공급을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
 - 환경/문화 : 시니어 여가문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교류를 증진함

<부산광역시>

- 부산시는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임
- 고령화 분야 :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 노령연금 지원, 그리고 요양

시설 확충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며, 고령친화용품 산업 박람회 개최로 시장 활성화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
 - 추모공원 봉안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고령층 생애 주기에 걸친 서비스도 제공함
- 성장동력 분야 : 부산 지역에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한층 강화. 2020년 부산 노인 사회 비전 수립 추진 등 고령화 연구 및 산업 기반 강화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대구광역시>

- 고령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년층 관련 부문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둠
- 요양 서비스 강화 :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과 노인 요양 시설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고령화 분야 :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 노인생활시설 노인에 대한 결연사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함
- 성장동력 분야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령층의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 역량을 높이고 있음. 향후에는 고령친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 지원, 고령자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산업 연계 정책 강화가 기대됨

<인천광역시>

-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둠
- 고령친화도시 조성 :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주거, 교통, 여가 등 도시 전반의 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 예를 들어, 고령자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등이 있음
-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 IoT,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독거 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고령층의 안전과 건강을 원격으로 관리함

- 일자리 및 사회 참여 : 고령자 취업 박람회 정기 개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관련 스타트업 지원, 기술 개발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도모함

<광주광역시>

- 광주시는 고령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병행함
- 노인 복지 인프라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전용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함
- 커뮤니티 케어 : 고령층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여 지원함
- 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자 친화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장려함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과학 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함
- 첨단 기술 활용 : AI 기반의 고령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개발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고령친화 서비스에 접목하는 연구 및 실증 사업을 지원함
- 고령자 교육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사회 적응력을 높임
- 일자리 및 여가 : 고령자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층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함

<울산광역시>

- 울산시는 산업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자 재취업 및 일자리 연계에 집중하며, 고령자 친화형 주거 환경 조성에도 힘씀

- 고령자 일자리 : 기존 산업 분야의 퇴직 고령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형, 공익형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공급함
- 고령자 친화형 주거 :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자 전용 주거 시설 공급을 검토함
- 사회 안전망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 노력함

< 세종특별자치시>

- 미래형 스마트 도시의 특성을 살려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함
- 미래형 고령친화도시 모델 :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홈 케어 등)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고령자 친화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함
- 고령자 맞춤형 주거 : 고령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며,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교류를 활성화함
- 생활 편의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공공 시설 내 고령자 친화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도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

< 경기도>

- 경기도는 방대한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령화 정책을 추진함
-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 고령층의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인 장기 요양 재택 및 시설 급여 지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그리고 시군 실버 인력 은행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고령층의 소득 안정화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노년 생활 영위에 크게 이바지함
-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 기술 개발 R&D 지원, 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 고령친화 제품 인증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강화함

<강원도>

-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사업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 고령화 분야 : 장수수당 지급(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월 2만원씩 장수수당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을 운영함
- 보충적 정책 방향 : 지역 특성을 살려 고령자 친화형 관광 상품 개발, 산림 치유 등 자연 친화적 고령자 여가 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원격 의료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

<충청북도>

- 베이비붐 세대 대비 및 노인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둠
- 고령화 대응 체계 : 식사 취약 계층 고령자를 위한 무상 급식 제공,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배정, 그리고 어르신 자원 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과 사회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함
- 산업 연계 : 바이오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식품, 의약품 개발 지원, 고령자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도모함

<충청남도>

- 여성 인력과 고령층 잠재 인력의 활용 기반을 다지고, 더불어 안전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함
- 인력 활용 및 평생 교육 : 고령사회 대비 평생 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의 역량 강화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함
- 지역 특화 :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자 친화형 농업 기술 보급, 스마트팜 연계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함

<전라북도>

- 농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 농업인 지원 및 농촌형 고령친화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둠

- 고령 농업인 지원 :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 안전 교육 강화, 농촌 지역 고령자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함
- 의료 및 복지 인프라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시스템 도입,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함
- 문화·여가 : 고령층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축제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함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높은 고령화율에 대응하여 고령자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주력함
- 돌봄 및 의료 접근성 : 도서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원격 의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함
- 지역 특화 고령친화산업 :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실버 관광 상품 개발, 고령자 친화형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함
- 고령자 귀농·귀촌 지원 :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정착 지원금,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을 제공함

<경상북도>

-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함
- 생활환경 개선 :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독거노인 무료 간병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함
- 스마트 돌봄 : IoT 기반의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 치매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층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함
- 지역 특화 :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령자 친화형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령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함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함
- 일자리 및 사회 참여 : 고령자 취업 상담 및 알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함
- 교육 및 여가 : 고령자 평생 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스포츠 활동 장려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술 개발 R&D 지원 등을 통해 경남 지역의 고령친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섬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령자 친화형 관광 산업 육성 및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임
- 고령친화 관광 :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무장애 관광 시설 확충, 시니어 가이드 양성 등을 통해 고령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함
- 스마트 헬스케어 :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고령자 맞춤형 건강 관리 앱 개발 등을 지원하여 고령층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 주거 및 문화 : 고령자 친화형 주거 환경 조성 지원,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임

□ 관련 조례 및 특화사업

<서울특별시>

- 주요 조례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특화사업 :
 -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 (50+ 세대 사회공헌형 일자리)
 - 시니어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 정책특징 : 대도시형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25개 자치구별 고령친화도시 조성

<부산광역시>

- 주요 조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특화사업 :
 - 부산형 케어로봇 개발 지원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 고령친화 의료관광 육성
- 정책특징 : 의료관광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집중 육성

<대구광역시>

- 주요 조례 :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중심
- 특화사업 :
 - 메디시티 대구 고령친화 의료관광
 - 고령친화 문화도시 조성사업
 - 찾아가는 이동의료서비스 (의료버스)
- 정책특징: 의료산업 기반 고령친화 도시 조성

<인천광역시>

- 정책현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중점
- 특화사업 :
 - 인천형 고령자 이동지원 서비스
 -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산
- 정책특징 :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없음, 예방적 접근

<광주광역시>

- 주요 조례 :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특화사업 :
 -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호남권 유일 권역별 지원사업)

- 2025년 고령친화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친고령 특화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 AI·4차산업기반 체험관 운영

○ 정책특징 : 전국 대표적인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대전광역시>

○ 주요 조례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대전형 고령친화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 정책특징 : 기술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울산광역시>

○ 정책현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심

○ 특화사업 :

- 울산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 산업도시 특화 고령자 안전관리 시스템

○ 정책특징: 산업도시 특성을 활용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경기도>

○ 주요 조례 :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 디지털 돌봄 서비스 확산

○ 정책특징 : 인구정책조정위원회 통한 체계적 고령사회 대응

<강원도>

○ 주요 조례 :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돌봄 로봇·AI 스피커 기반 원격돌봄 서비스

- '희망동행 케어택시' (복지+교통 통합지원)
- 농촌형 스마트 안심서비스
- 정책특징: 도농복합 특성 활용한 ICT 기반 돌봄 서비스

<충청북도>

- 정책현황 :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심
- 특화사업 :
 - 오송 의료기기 특화단지 연계 고령친화제품 개발
 - 충북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 정책특징 : 의료기기 산업 기반 고령친화제품 개발

<충청남도>

- 주요 조례 :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 특화사업 :
 - 충남형 고령친화 농업 융합서비스
 -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
 -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 정책특징 : 농업·관광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 주요 조례 : 전북특별법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법적 근거)
- 특화사업 :
 - 새만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130만㎡ 규모)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임상실증·기업육성 집적화
 -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 조성
- 정책특징 :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거점 육성

<전라남도>

- 주요 조례 :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전남형 농촌 고령친화 융합서비스
- 지역특화 건강기능식품 개발
- 해양치유 프로그램 연계 고령친화 관광
- 정책특징 : 농업·해양자원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특화

<경상북도>

- 주요 조례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경북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스마트 농업 연계 고령친화 서비스
 - 고령자 대상 맞춤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한옥 체험, 전통예절 교육 등)
- 정책특징 : 전통문화·농업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경상남도>

- 주요 조례 :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특화사업 :
 - 경남형 스마트 돌봄 로봇 개발
 - 조선·기계산업 연계 고령친화기기 개발
 - 주민참여형 공동나눔쉼터 운영
- 정책특징 : 제조업 기반 고령친화기기 개발 특화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특화사업 :
 - 제주고령사회포럼 개최
 - 제주형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 장수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정책특징 : 관광·웰니스 특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세종특별자치시>

- 정책현황 : 고령친화도시 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운영
- 특화사업 :

- 세종형 스마트시티 연계 고령친화 서비스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성 활용한 고령친화 인프라
- 정책특징 : 스마트시티 기반 차세대 고령친화 도시 모델

□ 주요 특징

- 법적 기반
 - 고령친화산업 조례 제정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11개)
 -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대부분 지역에서 조례 제정 완료
- 특화 분야별 현황
 - ICT·돌봄기술: 강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 의료·헬스케어: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 농업·식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 산업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광주광역시
- 예산 편성 특징
 -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사업에 80-90% 예산 집중
 - 자체 특화사업은 10-20% 수준이나 점차 확대 추세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험적 사업 활발
- 향후 전망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각 지역은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국가 차원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됨

2. 주요국(미국 · 일본 · 중국) 현황

1 동향

1 글로벌 소비 트렌드

□ 실버 경제(Silver Economy)의 부상

- 2030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14억 명으로 늘어나 10세 미만 아동 인구를 넘어설 전망
- 이전에는 노인 인구통계 범주의 상당 부분이 유럽과 북미 지역이었다면 2050년에는 이외의 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약 5배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세계의 각 산업분야에서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고령층의 요구를 젊은 층의 요구와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자체로 전문화되었으며 실버 경제를 창출
- 글로벌 컨설팅 업체 McKinsey社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소비자는 젊은 세대보다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크며, 이는 의료 부문 외에 주거, 교통, 그리고 여가 활동 등에서 전체 소비 성장의 40% 이상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들은 향후 경제 및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 2020년대에는 경제 및 소비에 대한 노인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며, 주요 소비층이 될 전망
- 노인들은 높은 수입(특히 OECD 국가의 경우 고령 연금)과 높은 수요(의료 및 전문 의료에 대한 수요)를 모두 가지고 있어 주요 소비층이 될 전망
- 중산층 소비자(하루에 최소 11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소비자) 계층에서 노인들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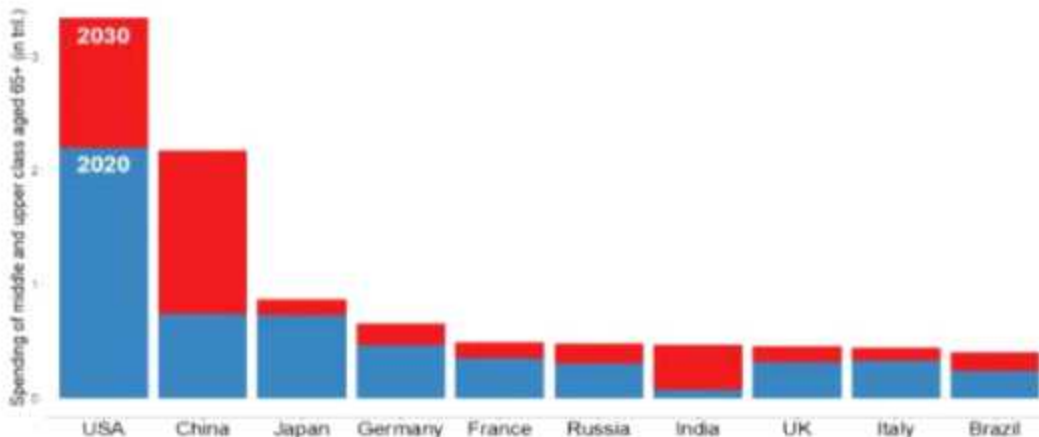
□ 주도권

- 실버 경제의 주도권은 OECD 경제국에서 신흥 시장인 아시아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

- 오늘날 실버 소비자의 연간 총 소비 규모는 아시아, 북미, 유럽 (각각 2조 3,000억 달러)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
 - 향후 2030년경 아시아 지역의 고령 인구가 매년 5조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 비중 측면에서 고령화 비중이 많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구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실버 경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실버 경제 지출 규모는 2020년에 9,000억 달러에서 2030년에 2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층의 지출이 9,000억 달러에 머물고 있는 일본을 추월할 전망

< 글로벌 상위 실버 경제 시장 >



[출처: Brookings, The silver economy is coming of Age: look at the growing spending power of seniors, 2021.01.14.]

□ 노인구매력

미 국

- 실버시장 규모 1위로 2025년 약 3조 5천억 달러
-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년생부터 1965년생까지)는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및 Z세대보다 풍부한 자산과 연금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소비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고령층 소비 지출은 2020년 약 7조 6,200억 달러
- 연간 소득은 2020년에 5조 6,000억 달러이고, 2030년 6조 4,000억 달러로 예상

일 본

- 대표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의 약 절반(47%)이 50세 이상이고, 2035년까지 54%로 증가 예상
- 일상생활, 주거, 의료, 여행과 같은 여러 부문에서 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가 활발히 공급되고 있음
- 노인들이 소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령층 소비 지출은 2020년 약 1조 6,200억 달러
- 연간 소득은 2020년에 1조 달러, 2030년에 1조 1,000억 달러로 예상

중 국

- 중국 고령화 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고령화 산업 발전 보고서(2021~2022)'에 따르면, 중국 고령층의 구매력은 2030년에는 26조 7천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50년에는 106조 7천억 위안으로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 중국 은퇴자 소비 지출은 2020년 약 4조 5200억 달러
- 연간 소득은 2020년에 2조 4,000억 달러, 2030년에 3조 7,000억 달러로 예상

2 글로벌 경제동향

미 국

- 실버시장 규모 1위
 - 2030년 무렵에는 약 8천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46년부터 1965년 출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이나 Z세대에 비해 자산과 연금 소득이 풍부하여,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비력을 유지함.
- 고령 인구는 의약품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며, 해당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의료 제품, 재생 의학 분야 등 의료 및 건강 관리에 특화된 첨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

중 국

-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음
- 중국은 세 차례의 베이비붐 시기를 경험했으며, 그중 1962년부터 1976년생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고령 친화시장은 초기 단계
 - 중국의 고령자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기준 10.5%이며, 2025년도에는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노년층의 잠재적 소비력이 2014년 기준 4조위안에서 2050년에는 106조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고령자의 소비성향은 매우 낮은 수준
- 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미용, 건강, 패션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실버 산업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은발경제(银发经济)'의 주요 소비층으로 불리는 중국의 실버 세대는 해외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세대이자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세대로 평가되며, 강력한 소비 경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다고 분석됨

- 중국 고령층의 소비력이 2030년에는 26조 7천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50년에는 106조 7천억 위안까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친화 시장의 발전은 초기 단계이며, 관련 정부정책은 공공복지적 성향이 강한 양로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노인용품, 노인서비스, 노인부동산, 노인 금융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음

일 본

-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가계 소비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2030년에는 4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자산 축적을 통한 충분한 소비 여력과 더불어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의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고령층 소비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일본의 고령 세대는 90%를 웃도는 높은 주택 보유율을 보이며, 국가 전체 금융자산의 59.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실버 시장은 고령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주거, 의료, 여행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음
 - 특히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층 친화적 제품들이 견고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3 실버산업 촉진사례

미 국

- 실버시장 규모가 1위인 미국은 고령인구가 의약,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Verified Market Research社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2028년까지 6,653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의료 지출은 '21년에 4조 3,000억 달러로 1인당 1만 2,914달러에 이르렀고,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CMS)에 따르면 '28년까지 6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욕구(aging in Place) 증가가 확대됨에 따라 홈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는 “연령이나 수입 수준,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상관없이 개인이 거주하는 집과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위험 부담 없이 독립적으로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 으로 정의

< 주요사례 >

- 개인경보 시스템(Personal Alert System)
 - 비정상적인 심박수, 불규칙한 리듬을 감시하고, 낙상을 식별 및 보고, 약물 복용 알림을 제공하고, 가정생활 모니터링 가능
- 목욕용 이동식 벤치 (Shower Transfer Bench)
 - 이동성 문제, 균형 문제 또는 유연성 문제가 있는 고령자들을 돌볼 때 유용
- 위치이동 시트(Positioning Transfer Sheet)
 - 나일론과 같은 특수 직물로 만들어진 침대 시트로 침대에 있는 사람의 위치 변경이 용이하도록 제작
- 피로 방지 바닥 매트(anti-Fatigue Floor Mat)
 - 단단한 표면(예: 콘크리트 또는 타일 바닥)에 서 있을 때 발, 다리 및 허리의 통증, 피로 및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
- 샤워 의자(Shower Chair)
 -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목욕하는 동안 샤워실에 앉을 수 있어 균형 잡기 가능

< 주요사례 >

- 조정 가능한 침대 레일(adjust ble Bed Rail)
 -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 추가적인 지지력을 제공
- 오버베드 테이블(Overbed Table)
 - 침대 위에서 앉은 자세를 취하고, 식사, 글쓰기, 독서, 일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이블
- 모션 센서 야간 조명(Motion-Sensor Nightlights)
 - 어두운 환경에서 추락, 부딪힘 등을 방지 가능
- 알약 분쇄기(Pill Crusher)
 - 노인이 삼키기 힘들거나 너무 커서 쉽게 삼킬 수 없는 경우 알약을 분쇄
- 일회용 언더패드(Disposable Underpads)
 - 요실금, 구토물과 같은 체액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침대위에 펼쳐서 사용
- 비상 대응 시스템(Emergency Response System)
 -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PERS) 또는 의료 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되는 소형 장치로 시계, 목걸이 및 기타 웨어러블 장치로 제공
- 시각-청각 전화기(Vision-Hearing Phone)
 - 시력 및 청력 상실을 도울 수 있는 특수 전화기로 대형 버튼 전화기(일부는 매우 큰 증폭 기능을 갖추고 있음)와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보청기 모델이 있음
- 보청기
 -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社は 미국의 보청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22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청력 상실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80세 이상 연령층은 보청기 제조업체들의 최대 시장

일본

- 재택 의료산업과 치매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가 발달될 전망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최근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재택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IPSS)가 '23년 4월에 발표한 최신

인구 전망에 따르면 '25년에는 1947년 부터 1949년 사이에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중 약 800만 명이 75세 이상이 되어 전체 인구의 17.5%가 될 것으로 조사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2025 문제' *를 대응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통해 환자의 원격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하도록 원격 의료 지침을 개정하는 등 가정 의료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

* 일본에서는 2025년 부터는 사회보장 비용이 크게 늘고, 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에 '2025 문제' 라고 지칭

○ 후생노동성(MHLW)은 2024~2029년을 다루는 제8차 국가 의료 전략 계획에서 일본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디지털화를 계속 촉진할 것

- 집에서 환자를 진단, 치료, 모니터링하기 위한 ICT 및 AI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전망
-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재택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 진료 및 건강 관찰 관련 획기적인 의료기기 와 진단 솔루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일본에서는 가정 산소 및 환기 요법 같은 가정 치료요법, 원격 의료 온라인 복약 안내 (telemedicine), 환자 모니터링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요사례

□ 휴대용 인공지능 기반 원격 진단기기

- 일본 솜포(Sompo)社は 이스라엘 원격의료 스타트업인 타이토케어 (TytoCare)社와 협력하여 심장, 폐, 피부, 귀, 목, 배의 원격 의료 검사를 위한 TytoCare의 AI 기반 장치를 일본 전역의 요양원 및 노인 간호 시장에 배포할 예정

□ 리프팅 로봇 허그(Hug)

- 리프팅 로봇인 허그(Hug)는 간병인이 거주자를 수동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을 대체하며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송 가능

□ 물개 로봇 파로(Paro)

- 반려 로봇으로 억울, 불안, 통증, 폭언, 폭력, 배회 같은 증상을 경감 시키고,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주의 분산 보조 역할 수행

□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 노래방과 같은 레크레이션 활동을 주도하거나 주민들과 대화하며 음악과 미리 녹음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운동 수업 진행

□ 일본 제약회사 에자이(Eisai) 사례

- 최근 아시아 기업들이 정신 건강 및 노인 간호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일본제약회사 에자이(Eisai)사가 치매를 겨냥한 새로운 디지털 헬스 사업을 설립
- Eisai사가 새로 설립한 전액 출자 자회사인 Theori Technologies Co.는 "치매 생태계 개발 가속화"를 추구

중 국

○ 재택 의료기기 및 노인 돌봄 시장이 성장될 전망

-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재택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객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택 의료 기기로 전환하는 추세

○ 중국 노인 돌봄 시장(China Senior Care Market)

- 중국은 '90-7-3' 노인 간호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문 간병 및 재활 서비스와 스마트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촉진
- * 90%는 가정, 7%는 중간 시설, 3%는 요양원
-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 20일 노인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개발 실행 계획(2021~2025)을 발표, 노인돌봄에 필요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

◇ 주요사례

□ 보청기

- 보청기 브랜드 Signia사의 덴마크 운영업체인 WS Audiology사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CIE)에서 보청기 시리즈를 공개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 중국의 종합 인터넷 업체인 Tencent사의 Ethereal Audio Lab 보고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9월 청력을 잃고 있는 고령인구는 약 1억 2,000만 명에 달하나 보청기 사용률은 5~10%로 고소득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인 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재택 의료 기기

- 중국 Bepsun社는 핀란드 원격 모니터링 장치 제조업체인 Kipuwex社와 협력하여 집에서 심박수, 온도, 근전도 검사(EMG) 등 다양한 생리학적 매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 개발
 - 의료 전문가 및 가정 사용자를 위한 통증 평가용 IoT장치 개발

□ 고령층을 위한 일회용 기저귀

- 푸젠성에 본사를 둔 생산업체인 Hengan International Group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회용 기저귀 생산중
 - 2022년에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17% 이상 성장했으며, 성인용 기저귀가 전체 제품의 30% 이상을 차지

□ 스마트 목욕장치

-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ZuoweiTech社는 스마트 목욕 장치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 2022년에 4,000만 위안의 기기 판매

□ 노래로봇(Duobo)

-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공연하며, 간병인 직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휴식을 제공
 - 중국은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돌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돌봄 로봇이 필요

□ 노인 생활 공동체 개발

- Evergrande Health社(舊 China Evergrande Group)는 중국 노인 의료산업의 주요 업체 중 하나이며, 노인 생활 공동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전국적으로 1,300개 이상의 노인 돌봄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

□ 노인 요양 시설

-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 홀딩스(Country Garden Holdings)도 노인 요양 시설, 생활 지원 아파트, 의료 센터를 건설하여 노인 요양 부문에 진출
 - 그 밖에 Poly Group Corporation, China Resources (Holdings) Co., Ltd., Sino-Ocean Group Holding Limited 등의 기업에서 참여

□ 스마트 홈 솔루션

- 노인을 위한 스마트 홈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Songzi Innovation社와 노인을 위한 의료 및 개인 관리 제품의 선두 공급업체인 Suncare Group이 합작으로 제품을 제공

2

전망 및 시사점

1 전 망

-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7억 300만 명(인구비중: 9%)에서 2050년 15억 명(인구비중: 16%)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례 없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50대 이상의 인구가 경제와 소비를 이끄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가 부상할 전망
 -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 시간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여 ‘실버 경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들은 △반응성 감소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이동성 감소 △최신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기타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 산업에 걸쳐 고령층을 위한 제품·서비스·인프라에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층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실버 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이 될 것이며, 홈 오토메이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eHealth, 스마트 시티, 기타 서비스의 발전은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이와 맞물려 실버산업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 고령층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로 바라보게 되면서 참여와 자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
- 노인들은 향후 경제 및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버 경제의 주도권은 OECD 경제국에서 신흥 시장, 특히 아시아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
 - 한국은 고령화 진입시기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국가들보다 늦은 만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시장 선점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실버 경제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이나 신흥시장에 수출 경쟁력 상실 가능성 우려

② 주요국별 시사

- 우리나라가 글로벌 실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 산업의 기술 국산화와 함께 국가별 실버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이 필요

미 국

- 세계 최대 규모의 실버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는 고령층이 의약 및 헬스케어 산업과 서비스의 주요 소비층으로 활동하며, 이들 분야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의 첨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령친화제품 및 헬스케어 고령친화제품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일 본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최근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일본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재택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될 전망
- 일본 시장에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참고삼아 정책 및 해외진출 전략 등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중 국

-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한국보다 고령화 진입 시기가 뒤처지지만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고령친화제품을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잠재력 있는 시장
- 2021년 10월 20일, 중국 정부는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개발 실행 계획(2021~2025)을 발표했으며, 계획에 의거하여 노인 돌봄에 특히 필요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중
- 중국의 '90-7-3' 노인 돌봄 모델이 스마트 노인 돌봄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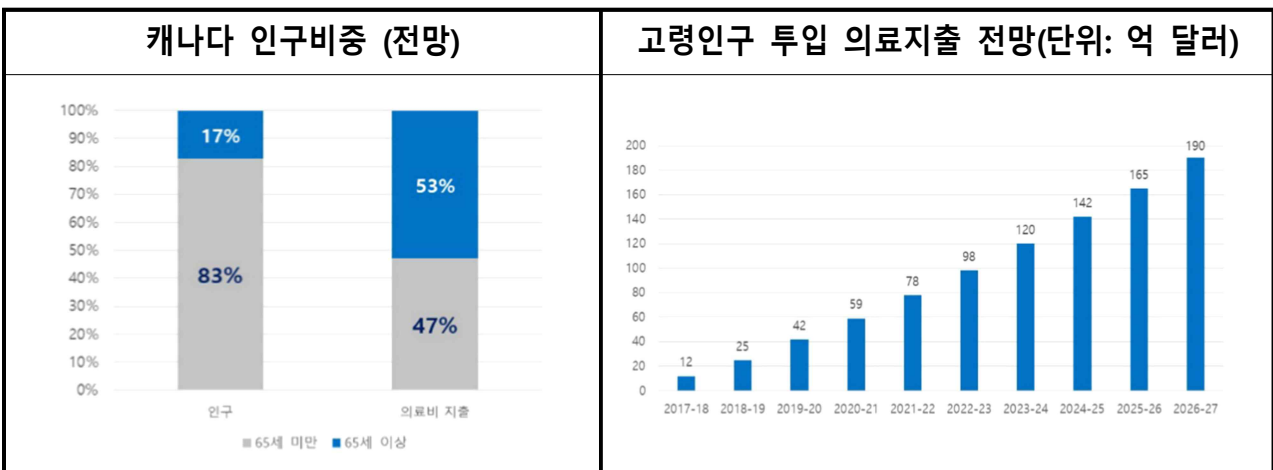
3. 캐나다 시장 현황

1 의료시장 특징

- **[의료 인프라]**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23.1명, 약사 수는 11.2명 정도임
 - 캐나다는 공적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주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Medicare)'라는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각 주마다 상이한 의료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재원/운영 이원화]** 주 정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원을 관리하면서 간접적으로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정부 의료 보험(GHIP)을 운영, 실제 의료 서비스는 민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만성질환]** 20대 이상 국민의 6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연평균 1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고혈압 환자 비중은 지속 성장해 2030년 60%이상, 2039년 70%달성 전망(캐나다 보건부, 2016)
 - * 4대 만성질환(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당뇨) 사망자가 전체의 65%(Gregory, 2019)
- **[정신질환]** 캐나다 국민 3명 중 1명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여러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는 캐나다인 7명 중 1명꼴로 정신 질환을 겪었으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19세 이하 환자 수가 연평균 2.6%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캐나다 공중보건기구, 2020)
- **[인구 고령화]** 캐나다의 고령자 인구는 지난 40년간 3배 증가*
향후 20년간(2017-2037) 68% 증가한 총 1,040만명 전망,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대비 2.1배 증가 전망(캐나다 건강협회 CIHI, 2020)
 - * 고령자 인구: 2백만(1977) → 350만(1997) → 620만(2017) → 1,040만(2037)
 - 고령자 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16.4%(총 592만명)에서 2020년 에 전체 18%(총 684만명)으로 증가(캐나다통계청, 2021)
 - * 2016년: 9.4%(65~74세), 7%(75세~) → 2020년: 10.4%(65~74세), 7.6%(75세~)
 - 65세 이상 인구 의료비 비중은 53% 전망(1인당 의료비는 12,000달러)

- 州정부의 고령자 의료비용 지출은 2020-21년 59억 달러, 2026-27년 190억 달러로 전망. 10년후 지역 정부의 고령자 케어 수요에 930억 달러 추가 소요 전망(캐나다 컨퍼런스보드, 2018)
- * 연방정부 의료비 지출은 1,300억(2010) → 1,790억(2020년) → 2,740억 달러(2030)전망
- * 2030년 요양원 및 관련 시설 거주자 65만명 전망(캐나다 왕립은행, 2020)
- 고령 인구의 약 73%가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고혈압 65.7%, 치주염 52% 등)

○ [인구 비중 및 의료지출 전망]



※ 자료: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2018)

의료서비스 선호도 분석

- 2002년 GSS(General Social Survey)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중 약 4분의 1이 장기간의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봉사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에서는 지난 20년간 의료 복지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의료 복지 시설에서 요양을 받는 노년 여성은 10% 미만, 노년 남성은 약 5%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성별 평균수명 및 생활 양식에서 비롯되는 차이로 인해, 남녀 고령자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시 여성 고령자의 복지 시설

이용 확률이 30%를 넘어서며, 남성 고령자 대비 10% 더 높은 차이를 보임. 이는 노년 여성의 의료 복지 시설 선호도가 대체로 높음을 의미함

- 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캐나다 고령 인구의 45%는 자택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잔여 55%는 가정 봉사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중 절반은 가족의 도움을 병행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주된 배경은 어르신들이 낯선 환경보다 안락한 자택과 익숙한 주변공간에서 지내기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임.

거주환경에 따른 복지시설 선호도 분석

- 전체 노년 여성의 43%와 노년 남성의 16%는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약 19%의 여성과 17%의 남성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호함.
- 여성고령자는 동거형태에 따라 복지 서비스 선호가 달라지는데, 가족과 함께 살아온 경우 재가 서비스 의존율이 높았고, 독신여성은 시설 요양을 선호했으며, 배우자와 동거한 여성은 재가 서비스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상당수의 남녀 고령자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만, 전통적 가사 분담 문화의 영향으로 상호 돌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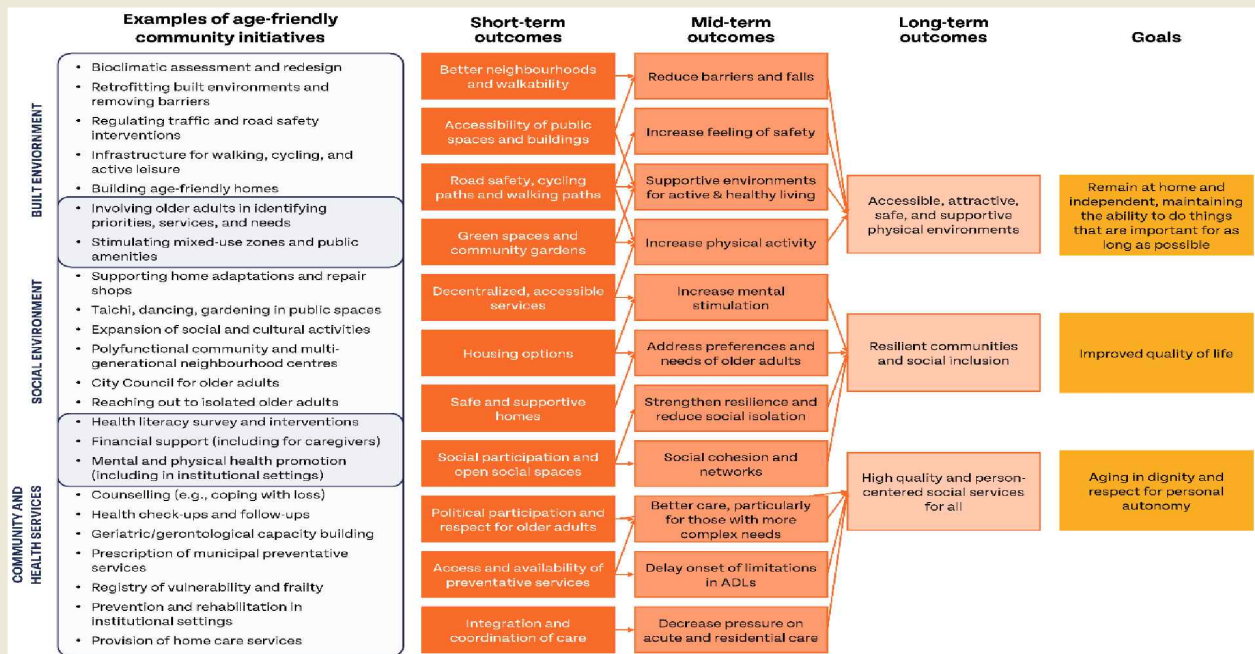
사회활동규모와 복지시설 선택과의 연관성 분석

- 평균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척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거나 동료들과의 유대가 깊을수록 의료복지 시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가족들과의 왕래가 잦은 고령자일수록 재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남.

2

캐나다 정부 고령친화산업 정책방향

- (배경) 2024년 65세 이상 캐나다인은 750만명(18.8%), 2068년 그 비율은 29%로 슈퍼 에이지드 국가 예상. 또한 65세 이상 캐나다인의 96%는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나이드는 것을 선호 (Hong, 2024)
 - (방향) 캐나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건강·존엄”을 핵심가치로 하는 전방위적 고령친화 정책 체계 구축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청 (PHAC,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이 중심이 되어 정책 추진중
 - 특히, WHO의 고령친화도시(AFC)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중심의 Age-Friendly Communities Initiative*를 활성화
- * (개요) WHO의 8개 영역(외부공간, 건물, 도로, 주택, 교통, 사회참여, 건강서비스 등)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2006년부터 채택한 커뮤니티 기반 고령친화 정책 (내용) 물리·사회 환경을 노인에게 친화적으로 설계해 안전·건강·사회 참여를 촉진 하는 정책으로 지방 자치체 지원, 약 800개 지역사회에서 진행중 (Hong, 2024)



- 고령 친화 이니셔티브의 예시와 기대 효과(Jackisch et al., 2015) -

- 아울러, Aging in Place(주택에서 노후 보내기)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와 에이지테크(AgeTech) 분야에서 정책 지원, 자금 조달, 기술 R&D, 규제 제도 마련 강화

3

추진체계

- (건강정책)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 역할 : 캐나다 보건부 산하 연방기관으로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 실행 담당
 - 기능 : 고령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캠페인 기획, 연방차원의 노인건강 관련 연구, 전략보고서 발간(‘Healthy Aging in Canada: A New Vision, A Vital Investment(2006)’, ‘State of Public Health in Canada’ (매년) 등)
- (정책자문) National Seniors Council (NSC)
 - 역할 : 연방 자문기구로, 연방정부장관의 지명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
 - 기능 : 고령자 빈곤, 사회적 고립, 사회참여 등에 관한 리서치 수행 등 고령자 정책 자문 및 사회통합 전략 개발(Social Inclusion Strategy)
- (기술혁신) Age Well Network of Centres of Excellence (NCE)
 - 역할 :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기술기반 고령친화 연구 및 상용화 네트워크로 전국 40여개 대학 및 기관과 협력중
 - 기능 : 고령자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인공지능, 웨어러블, 스마트 홈 기술 등) 및 스타트업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 고령자 대상 디지털 접근성 향상(Digital Inclusion) 전략 추진
- (지역사회 개발) Age-Friendly Communities (AFC) 프로그램
 - 역할 :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기능 : 지역사회 기반 주거, 교통, 보건, 사회참여 환경 개선, 지방 정부 및 커뮤니티의 정책 설계 가이드 제공
- (복지·연금)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 역할 : 노인복지 및 연금관련 정책 관할 총괄부서
 - 기능 : Old Age Security (OA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등 노령연금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저소득 고령자 지원을 위한 재정안정성 정책 운영
- (건강연구)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 역할 : 고령자 건강 연구를 수행하는 연방 건강연구기금기관,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및 연구 생태계 조성
- 기능 : Dementia Research Strategy, Chronic Disease Research 등 고령자 관련 연구비 지원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 분야 중심 연구

4 주요정책

- 자립적 노후 지원 : ‘Aging in Place’ 전략 중심의 고령자 자율성 강화
 - (방향) 고령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 (전략) 주거 지원,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확대, 경증 및 중증도 돌봄 제공, 사회적 고립 예방 등
 - (주요사례 1) Age Well at Home Initiative (2021-2026)
 - 개요 : 2021년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시작한 고령자 자립 생활 지원 신규 프로그램
 - 대상 : 경중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고령자
 - 내용 : 자원봉사 기반의 청소, 식사 제공, 가벼운 수리 등 일상생활 지원, 총 80여개 시범사업 시행, 연방정부 총 4천만 CAD 투입 (프로젝트당 \$300,000~\$800,000)(Government of Canada, 2024)
 - (주요사례 2) Age-Friendly Communities (AFC) Initiative
 - 개요 : WHO의 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추진된 전국 규모 고령자 친화 도시 조성 프로그램
 - 대상 :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커뮤니티,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중소도시 지역
 - 내용 :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Aging in Place)을 돕기 위한 도시·지역 설계 개선
 - ▶ WHO 기준 8대 분야(교통, 주거, 건강, 참여 등)에 걸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 2024년 기준 전국 560개 이상 커뮤니티 참여

○ **요양 및 홈케어 서비스 질적 향상 및 공공성 강화**

- (배경)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노출된 장기요양시설(LTC)의 감염취약성과 낮은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 대두
- (방향) 요양서비스의 표준화, 질적 향상, 감염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 책임성 강화
- (주요사례) Safe Long-Term Care Act (제정 추진 중)
 - 전국 단위의 요양시설 대상 공통된 서비스 질 기준·운영 규정 도입
 - 감염 통제, 인력 배치 기준, 입소자 인권보장 등을 법제화
 - 2023년 1월, 캐나다 표준심의회 (SCC) 등이 합의한 장기요양시설 표준안이 발표되어 의견 수렴중(Government of Canada, 2023)

○ **기술 기반 돌봄 혁신(AgeTech) 촉진**

- (방향)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과 확산을 국가전략으로 채택
- (운영) Living Lab 모델을 활용하여 고령자와 가족, 커뮤니티,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실증환경 조성
- (주요사례 1) Aging in Place Challenge(캐나다 국립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2021-2028)
 - 고령자 맞춤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
 - 낙상 예방, 조기질환 탐지, 약 복용 알림, 커뮤니티 연결 기술 개발
 -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접근성 개선 활동
- (주요사례 2) AGE-WELL NCE (2015-현재)
 - 캐나다 최대 규모의 고령자 중심 기술 연구 네트워크로 실제 고령자와 가족이 연구 기획 초기부터 기술개발에 참여, 리빙랩 기반 테스트 환경 운영
 - 인공지능 기반 원격의료, 스마트홈 기술, 디지털 복약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고립예방용 영상통화 플랫폼), 고령자 전용 SNS, 말벗 로봇 등

○ 돌봄자 지원 및 제도 정비

- (방향) 가족, 친구 등 비공식 돌봄자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인정 확대, 연방차원의 국가 전략(National Caregiving Strategy) 수립 중
- (주요사례) National Caregiving Strategy
 - 돌봄자 수당, 세제 혜택, 고용 안정성 보장 등 법·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 공식 돌봄자(홈케어 종사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 전문 교육 강화
 - 지방정부, 민간, 커뮤니티 기관과 연계한 다부문 협력모델 구상
 - 돌봄자 정신건강 및 번아웃 방지를 위한 심리·휴식 프로그램 추진

4 고령친화산업 정책 및 산업 현황

□ 헬스케어 및 요양 서비스

① 노인 요양 시설(Long-term care homes)

- (규모) 2021년 기준 캐나다 전역에 약 2,076개 시설, 198,220 침상이 운영중이며, 이것은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29개 침상 수준(CIHI, 2021)
- (현황)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의 캐나다인 약 205,000명이 LTC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52,000명 이상이 요양원 배정을 받기 위해 대기(NIA, 2021)
 - *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인구 7백만명 추산(전체인구의 약 18.48%), 그중 85세 이상은 861,000명(약 2.3%) (Health Canada, 2020).
- (운영) 영리(57%), 비영리(24%), 지자체 소유(17%), 대표적 영리기업 Extendicare(100개 시설, 직원 약 23,000명) (CIHI, 2021)
- (문제점) 의료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공석률 60% 상승 (2019년 3.2% - 2024년 5.1%), 전체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 2029년까지 간호사와 PSW(personal support worker)가 최소 58,600명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Ontario Long Term Care Association(OLTCA), 2024)

② 재가 간호서비스(Home care)

- (규모) 캐나다 홈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 274억 1,0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11.2%의 성장

를 보임 (Grand View Research, 2024)

- (현황) C.D. Howe Institute의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캐나다의 약 6.1% 가구가 홈케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2.8~4%)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 중 6.5%, 약 46,000명이 필요함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statistic canada, 2021)
- (문제점) 접근성 및 미충족 수요 다수 발생, 특히, 저소득층, 이민자, 일부 소수 인종 그룹에서 미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노인 요양 시설(Long-term care homes)	재가 간호서비스(Home care)
장소	전문 시설 (요양원, LTC홈)	주택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지원	24시간 간호·개인간호, 식사·청소·세탁 등 포함	간호, PSW, 물리·작업치료, 사회복지, 가사지원, 데이프로그램, 응급·완화 돌봄 등
운영	주정부·연방 협력, 시설당 운영비 + 일당 지급. 온타리오 주는 615개 시설, 7.6만 명 입소	주정부·지방정부 협업, 연간 30억 CAD+ 투자, 약 67만명 수혜 (온타리오 기준)
비용 부담	의료·간호는 공공 부담, 숙식비는 본인이 부담, 소득 기반 보조금 및 계획적 비용 보조 가능	소득·자산에 따라 공공 + 본인 부담, 초과 시 민간 서비스 이용 (PSW: CA\$25-75/시간)
정부 투자	연방 'Safe LTC Fund' 등으로 인프라 개선에 수백만 CAD 지원 (Government of Canada, 2021)	연방-온타리오 10년간 협약 구현(매년 약 30억 캐나다달러 예산 집행) 최소 60억 달러 규모 홈 커뮤니티 케어 투자 (2023년 연방정부 50억 + 17억 달러 투자) (Government of Canada, 2021)

□ 시니어 주거 형태

① 독립형 시니어 주택 (Independent Living)

- 주로 65세 이상 건강한 시니어 대상의 아파트 혹은 콘도 형태
- 입주자는 요양이나 의료서비스의 상시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필요시 외부의료서비스 별도로 계약하여 이용
- 공용 라운지, 피트니스 공간, 정원 등 커뮤니티 기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교류, 고립예방, 취미 문화프로그램 운영

- GTA(토론토 대도시권)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 수요 빠르게 증가
- Canada Retirement Plans(2021)에 따르면 월 평균 비용은 약 \$1,500에서 \$3,500사이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② 지원형 생활 주택 (Assisted Living)

- 입주자는 주로 스튜디오형 또는 개인형 유닛에 거주하며, 24시간 상주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기본적인 일상 지원 서비스 제공
- ‘생활형 시니어 커뮤니티’ 라는 명칭으로, 응급 호출·안전설비·레크리에이션·경증 의료(치매 지원 등) 포함하는 복합형 구조로 발전중
- 단순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생활환경을 지향
- Insurdirary의 리서치(2023)에 따르면 평균 월세 \$2,000-\$6,000 (홈케어 서비스 포함하면 더 높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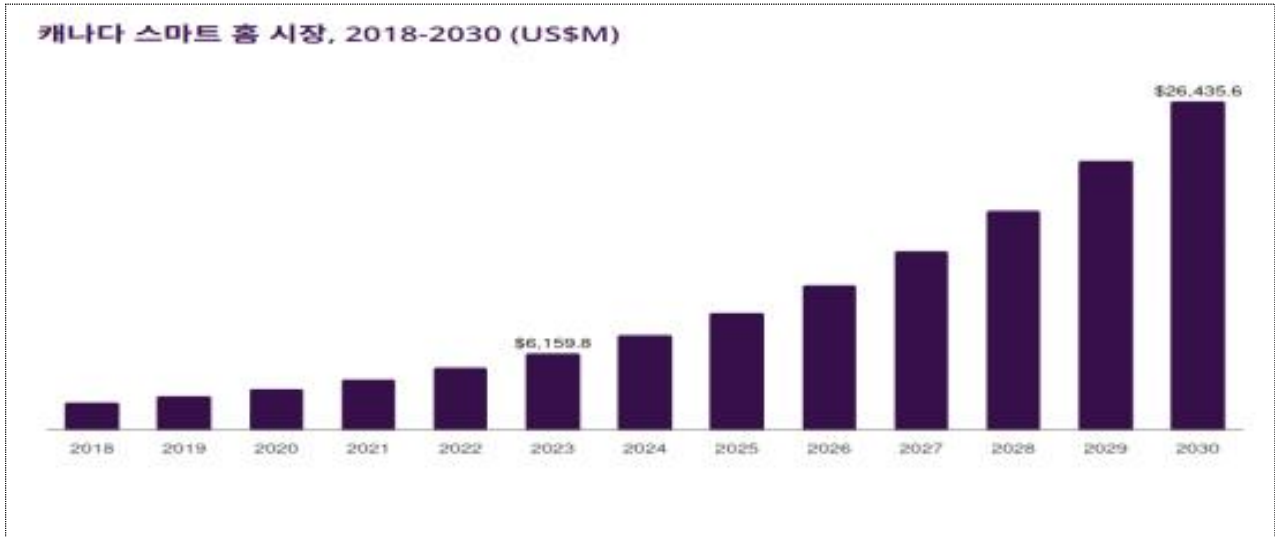
③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에서부터 점진적인 돌봄(서비스, 장기요양)까지 단일 커뮤니티 내에서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및 돌봄 복합 모델
- 입주 시점 계약을 통해 단계별 케어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노후 불안정성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
- 고급 민간 주택단지나 프리미엄 실버타운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

④ 에이지-프렌들리 주택 개조

- 나이 들어도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비장애 플로어링 등 가정 내 안전 개조 추진
- 물리적 개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센서, 자동조명, 음성인식 기기 등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통합 개조 수요 증가
- 에이징 인 플레이스 트렌드와 맞물려, 기술 기반의 주택개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캐나다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3년 61억 5,990만 달러의 매출, 2030년 264억 3,530만 달러 예상



- 정부보조제도 운용(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HATC) : 최대 CAD 20,000 개조비용 중 15% 세액공제(최대 CAD 3,000)

□ 주택 관련 고령자 지원 정책

① 국가주택 전략 국가 주택 전략 (National Housing Strategy, NHS)

- (목적) 캐나다 전역의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 공급과 주택 안정성 강화
- (내용)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및 지원 주택 공급 확대,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및 접근성 개선 지원, 10년(2017~2027)간 약 7조 원 (CAD 70억 달러) 투자
- (주요사례)
 - Affordable Housing Innovation Fund :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적 주택 모델 개발 지원
 - ex) Havre des Pins 협동조합 (Sherbrooke, 퀘벡주) : 협동주택 방식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로, 5개 건물에 총 80가구 규모, 연방정부가 C\$6 million을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
 - Rental Construction Financing Initiative (RCFI): 고령자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에 금융 지원 제공

- ex) Parkdale Housing (Edmonton, AB) : 136가구 규모의 저소득 대상 임대 주택 프로젝트, 저금리 장기융자(HI-C)로 지원받아 완공
- Community Housing Transformation Centre: 주택 제공 단체에 기술, 정보, 지원 제공
- ex) Ontario Aboriginal Housing Services 전략계획 지원 (온타리오주) : CHTC의 자문 및 전략 계획 수립

②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HATC)

- (목적) 고령자와 장애인이 자택을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 제공
- (내용) 최대 CAD 20,000까지 주택 개조 비용에 대해 15% 세액 공제 (최대 CAD 3,000),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신청 가능
- (지원)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안전 바닥재 적용 등 안전 개조 대상, 자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동거인에게 적용

③ Canada Housing Benefit (CHB)

- (목적)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
- (내용) 각 주 및 지역 정부가 운영하며, 고령자 중 소득이 낮은 대상자에게 월별 임대료 보조금 지급,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점차 확대
- (주요사례)
 - 브리티시컬럼비아 (BC) - SAFER 프로그램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 ▶ 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으로 월별 현금 지원 제공
 - ▶ 내용: 2024년 4월 일회성 \$430 지급. 소득 상한을 \$33,000에서 \$37,240로, 최소 월 보조금을 \$25에서 \$50으로 인상. 기존 수혜자 평균 보조금은 \$310로 상승. 약 4,800명의 고령자가 추가 혜택 (BC Ministry of Housing, 2024; Rental Housing Business, 2024).
 - 온타리오 (Ontario) - Canada-Ontario Housing Benefit (COHB)
 - ▶ 운영 : 주정부와 연방의 COHB 협력→ 사회주택 대기자, 저소득·고령자, 장애인, 위기 생존자(성폭력 등) 우선 지원

- ▶ 실적: 2020년부터 시작되어 토론토시 기준 2024년 총 약 44,100가구가 지원받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500-\$700 수준의 임대료 보조 (Niagara Regional Housing, 2024; Leeds and Grenville Housing Services, 2024)

④ 지원 주택 및 커뮤니티 서비스 투자

- (목적)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주택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 (내용) National Housing Strategy와 연계하여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건강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데이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투자

□ 여행 및 여가활동

- 시니어 대상 투어 및 문화 체험 : Cycling Without Age 트라이쇼(세발 자전거)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동네 나들이를 즐기는 프로그램. 캐나다 Saskatoon 등지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기여
- 가상현실(VR) 여행 : 고령층 대상 VR 프로그램은 실제 여행과 유사한 몰입감 제공하며, 참여 만족도가 높고 계속하고 싶은 의향 다수
- 디지털 플랫폼 개발 : 노인의 인터넷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요가 클래스 및 지원,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참여기회 제공
 - * 캐나다 65세 이상 노인의 82.6%가 인터넷을 이용, 75세 이상도 72%. 이메일 (74%), 메신저 앱(51%), 영상 통화(38%) 등 다양한 채널 사용 증가(Statistics Canada, 2023).
-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대응 : 전화 친구 연결,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Senior Centre Without Walls 등 비대면 교류 시스템 도입으로 고독감 감소

□ Age Tech 산업 육성

- (배경) 캐나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에이지테크 분야의 연구 개발, 실증, 기업육성 등을 포괄하는 생태계 조성 중
 - * 'envisAGE' 네트워크(MEDTEQ+와 AGE-WELL이 공동 주관)를 핵심조직으로 하여 AgeTech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구조적으로 지원 (Health Canada, 2022; AGE-WELL, 2022)

- Beachhead™ 센터(14개) : 고령자 대상 파일럿 실증 환경(요양원, 자택 등) 제공
- Community Labs : 실제 커뮤니티 환경에서 기술 실증
- Innovation Hubs (5개) : AI·센서·사용자 경험 등 전문 지원
- (지원) 산업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2년 SIF(Strategic Innovation Fund)를 통해 envisAGE에 총 8,500만 CAD 지원(김숙경, 2022)

- (주요 추진 사례)

① Aging in Place Challenge (2021-2028)

- 목적 : 고령자가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실증 및 기술설계에 중점
- 운영 : NRC(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 주도, 주·지방정부·산업·학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리빙 랩(Living Lab) 환경 조성
- 내용
 - ▶ 로봇 돌봄 (Care Robots), 이동·이송 보조 로봇, 요양원에서 환자 이송, 욕창 예방, 물리적 부담 감소에 실제 사용
 - ▶ 사회적 상호작용 로봇(Lovot Social Companion Robots) : 일부 UBC, 밴쿠버 병원에서 실험 적용 → 감정적 고립 완화 및 정서적 효과
 - ▶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 집 내부 센서를 통해 넘어짐·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Stick-figure(실루엣)) 형태 데이터 전송
 - ▶ 웨어러블 + 스마트폰 모니터링: 스마트워치와 AI 플랫폼을 연결해 실시간 건강 경고 전송 (예: BC주 요양시설 시범 운영)

②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향상

- (목적)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해소,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사례) 저소득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제공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 ▶ TELUS “Mobility for Good for Seniors” - 저소득 시니어에 스마트폰

+저비용 요금제 제공 → 원격진료, 약 리필 알림, 보안 교육 등 접근성 기반 지원

- ▶ HelpAge Canada “Let’s Connect” : 강의·기기·데이터 플랜 제공→ Nunavut 등 북부 포함 29개 커뮤니티에서 800명 이상 고령자 디지털 접근 지원

③ 인지 건강 및 치매예방

- 치매 예방 및 인지 게임 플랫폼 HippoCamera (토론토대 개발 앱) : 짧은 기억 영상 저장·재생을 통해 에피소드 기억력 50% 향상, 장기적 기억 강화에 도움
- Dementia-friendly e-reading 앱 : 치매환자를 위한 전자책 플랫폼, 자동 페이지 전환·맞춤형 텍스트 제공 → 인지 자극 및 자존감 향상에 효과
- 정부 지원 치매 예방 앱: Ontario·New Brunswick 등에서 “Up Close and Personal” 프로젝트 진행, 게임·운동·영양 모듈 포함한 앱 치매 예방 앱 개발중

4 시사점 및 결론

□ 요양·홈케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캐나다의 LTC(Long-term Care) 시스템은 민간 중심 운영(영리시설 57%), 인력 부족, 서비스 질 편차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사망과 감염이 집중
- 재가 간호(Home care)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제도 미흡, 인력 부족,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실질적 접근성이 낮음
 - ⇒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Safe Long-Term Care Act 조기 제정 및 전국 표준 도입
 - 비영리·지자체 직영시설 확대, 인력기준 법제화
 - ⇒ 재가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개선
 - Home care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교육 지원 확대
 - 돌봄 종사자(PSW) 인건비 보전 및 처우 개선

□ Age Tech 산업 관련 상용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실증 중심 구조

- Aging in Place Challenge, envisAGE 등의 실증 프로젝트는 활발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비율은 낮음
- 스타트업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Health Canada) 절차나 주정부 승인 규제의 장벽으로 진입 속도 저하
 - ⇒ “실증 → 상용화“ 연계 메커니즘 필요
 - 연방정부의 실증투자 이후 주정부의 보험제도(예: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나 장기요양 시스템 내 공식 도입 경로 마련이 중요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AgeTech 제품의 임시허가 · 시장 테스트 기회 제공 필요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노인의 약 8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75세 이상 고령자나 시골 · 저소득층에서는 기술 활용률이 현저히 낮음. 단말기 보급과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적 · 지속적인 지원 부족
 - ⇒ 디지털 포용 전략 강화
 - 단발성 기기 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교육 + 기술지원 체계 + 지속적 요금제 보조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돼야 함
 - 디지털 접근성과 보건의료정보 접근권을 시민권 차원에서 보장하는 논의가 필요함

□ 서비스 지역 불균형

- 도시지역(토론토, 밴쿠버 등) 중심의 시범 운영이 많고, 농촌 · 원주민커뮤니티 대상 확대는 아직 제한적
- 북부지역에서는 인프라 미비로 센서 기반 모니터링이나 앱 기반 돌봄 서비스 활용이 어려움
 - ⇒ 지역 기반 분산 생태계 조성
 - BC주 · 온타리오 외에도 앨버타, 사스캐처원, 퀘벡 북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AgeTech 서비스 실증과 인프라 보급 정책 필요

□ 재정 지속성의 불확실성

- envisAGE 및 Age-Well은 연방정부의 전략적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에 의존하는 형태이며, 장기 재정계획이 분명치 않음
 - 지방정부나 민간 파트너의 후속 투자 유치 구조가 약해, 기술 기업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
- ⇒ 민관 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 마련
- 금융권, 보험사, 부동산 디벨로퍼 등이 참여하는 AgeTech 투자 펀드 조성 추진 필요
 - 사회적 효과가 큰 AgeTech 기술에 대해 사회성과보상채권(SIB) 도입 검토 가능

□ 결론

- 캐나다의 고령친화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체계 중심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적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
-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불균형적이며, 제도적으로 단절, 지역간 격차, 인프라 취약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한 요양 재가 돌봄 구조 개편, 통합케어 시스템 강화와 정책 연계, 민간 참여 유도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 실질적 정책 벤치마킹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며, 복지통합과 디지털 기반의 고령 친화 전략의 설계에 참고

Ⅶ. 경상북도 대응방안

1 추진방향

□ 산업 기반 조성 및 제도적 체계 강화

- 기초연구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북 내 고령친화 관련 연관산업 및 육성 품목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관련 산업체에 대한 DB 구축하여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자료 활용
 -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성공 사례 분석 및 차별화 포인트 발굴
- 제도적 기반 및 행정 체계 정비
 - 고령친화산업 육성 로드맵 마련 및 관련산업 행정지원을 담당할 전담부서 지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기술의 연구 및 개발(R&D)을 수행하고, 이러한 성과물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여 상용화(사업화)하는 전반적인 과정 필요
 -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진출 촉진
- 가칭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 (역할)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는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확충과 사업화 지원
 - (운영) 기존의 경북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의 초기 운영 자금을 도(道)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후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능) 정책정보 제공, 기업 상담, 창업·인큐베이팅, 인력양성, DB 운영
- 국가 단위의 통합 컨트롤타워 연계 필요
 - 고령친화산업은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 의약품,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영역의 연구와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통합적 R&D체계가 필수 그러나, 현재 관련 R&D 지원 기능이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범부처 통합조정 기능 강화 필요

- 범부처·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혁신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고령친화산업의 안정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산업,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산업계-학계-연구기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 포럼, 세미나, 워크숍 운영을 통한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로 최신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고 신사업 창출 기반 마련
-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 각 권역의 특성과 기존 산업 기반을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특화 거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도시
북부권	산림휴양 기반 고령친화산업	영주, 청송 등
서부권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글로벌전진기지로 육성	구미, 김천 등
남부권	한방 및 건강기능식품 특화하여 실버건강복합도시 조성	경산, 영천 등
동부권	힐링관광 + 의료기기 융합으로 관광과 산업의 융합을 도모	포항, 경주 등

- 인재 육성과 창업 인큐베이팅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청년 창업 유도 및 초기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강화

□ **스마트 헬스케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집중지원
 - 고령자 건강정보·의료정보·생활 데이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이를 활용, 건강관리 제품, 돌봄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예) 간병로봇, 이동보조기기, 건강모니터링 앱 등

- 수요 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 향후 고령자 평균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득수준이 높은 고령층은 즐거움의 추구, 정보의 활용,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욕구 존재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고령층의 요구를 세분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예) 건강식품, 항노화 제품, 위약품, 의료기기, 재교육 프로그램, 자산관리 등
 -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정의 등 확장 필요 - 다양한 산업군과 비즈니스 포함 및 기존 고령자 또는 유병자를 중심에서 예비 고령자, 건강한 고령자 등의 다양한 수요 포괄

□ 시장 확대 및 산업화 촉진

- 판로개척 및 내수·수출 확대
 - 고령친화도시 시범지역 운영 → 내수 시장 확대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국제 전시회 유치 및 참가 →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우수제품 인증, 홍보, 수요처 연계 강화
- 국산화 및 상용화 지원
 - 수입에 의존했던 고령친화품목의 국산화 제품 개발지원
 - 국내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역량과 혁신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고 부가가치 IT융합기기 등 성장이 예상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산화 개발 지원
 - 초기시장 형성 및 유통 지원
 - 새롭게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령친화체험관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시장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초기 유통 지원 방안으로 바우처 및 우선 공급 제도 도입을 통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함
- 고용창출 연계
 - 고령친화산업 내 전문인력 확충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고령자 대상 서비스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확대

2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 1. Age-Tech 사업 >

① 필요성

- Age-Tech 산업은 우리의 강한 제조업·IT 기반을 활용하여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가능
 - 한국은 반도체,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5G·AI·IoT 등 기술력도 세계적 수준
 - *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 6위(세계은행 '23), 디지털 경쟁력 순위 6위(IMD, '24)
 - Age-Tech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
- 복지비용 절감·인력부족 문제 해소·사회 안전망 고도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
 - 우리나라는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 및 향후 고령화율 상승 전망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인력의 공급은 한정적이어서, 인력부족 심화 예상
 - * 돌봄인력 부족 전망('24, 한국은행) '22년 19만명 → '32년 38~71만명
- 바이오·디지털 의료기기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생산적 소비로 전환
 -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개개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가능
 - * 정부 건강수명 연장 목표 : '18년 70.4세 → '30년 73.3세
 - 이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비 지출 감소가 다른 분야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 Baicker 등 연구(2010) : 건강관리에 1달러 투자시 의료비 3.27달러 절감 가능
 - 디지털 기술과 AI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기는 노인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립감 해소 및 사회 참여 확대

② 추진방향

□ Age-Tech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상용화 노력 필요

○ (자금 지원) 첨단기술 제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

- 돌봄로봇 시장 등은 아직 초기단계로 수요가 적어 높은 생산 단가의 책정이 불가피하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시장 확대 필요
-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

*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구축 비용: 가구당 약 300만원 추산

○ (급여품목 지정 확대) 해외 인증 등 성능이 검증된 첨단기술 활용제품은 예비급여가 아닌 본 급여 품목 지정을 적극 지원

○ (지원기준 정비) 고령자 서비스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 인센티브 제공시 인증 등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 필요

○ (원격진료 활성화) 고령층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Age-Tech 제품·서비스 규제완화, 인증 및 표준화 지원 필요

○ (인증·표준화 규제 개선)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신제품의 개발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규제가 상존하고, 인증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개선 필요함

- 이러한 규제는 Age-Tech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시장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스마트홈케어) 스마트 홈케어를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활용한 건강코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성화 필요함

-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함

□ 유망 실버경제 분야에 대한 Age-Tech R&D 및 실증 확대 필요

- **(실증인프라 확대)** 돌봄로봇 등 Age-Tech 제품 실증이 현장 중심 적용을 통해 성능 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확대 필요함
 -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나 요양시설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실제 거주 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 고령층의 생활 패턴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됨
- **(R&D 투자 확대)** 재생의료와 항노화 분야는 미래 산업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이 분야 기술 발전은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됨
 - 꾸준한 연구 개발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됨
 - 예산 투자가 확대되어야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민간 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고,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가능하게 함

③ 경북도 Age-Tech 사업 중점분야

○ 경북도의 경우, 정부 추진 방향(기술·시장 성장성, 국내 산업 기반, 최근 노인 특성 및 글로벌 규제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①돌봄로봇, ②웨어러블(근력보조)·디지털의료기기(건강모니터링) ③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 치료, ④항노화·재생의료(줄기세포 등), ⑤스마트 홈케어 등 5개 분야 중점 추진이 필요

< 참고 : 에어지테크 사업 분류 >

< 기술 유형별 분류 >

○ Age-Tech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헬스케어, 웰니스, 주거, 생활, 돌봄 등으로 구분(삼성글로벌리서치)

- 특히, 노인성 질환 대응, 항노화, 스마트 홈케어, 웨어러블 및 보조기기, 돌봄 로봇 분야가 기술융합 및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분석

분류		정의	분류		정의
헬스케어	노인질환 대응	노인질환 예방 및 치료	생활	일상 지원	일상활동 방문/원격 지원
	항노화·재활	노화 방지 및 기능 재활		교통·이동	교통수단 이용 지원
	응급 대응	응급상황 감지·출동		보조기기	시청각·근력 보조 기기
	복약 관리	규칙적 약품 복용 지도	돌봄	홈/시설 케어	간병인/로봇의 케어 지원
웰니스	스마트 홈케어	홈가전 기반 웰니스		인지 케어	치매 예방 및 실종 방지
	웨어러블	웨어러블 기반 건강 모니터링	기타	금융·보험	은퇴 후 재산·투자 관리
	낙상예방·감지	낙상 등 사고 예방·감지		소셜·소통	시니어 만남·커뮤니티 활동
피트니스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	교육·취업		디지털 교육, 사기예방 등	
주거	주택	시니어 주택 임대·공유	콘텐츠	맞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체 참여	주거 공동체 활동 지원	인증 준비	호스피스, 상속·장례 지원	

< 활용 목적별 분류 >

○ 고령자 자립생활기술(AIP Age-Tech), 고령자 돌봄기술(Care Age-Tech), 고령자 기술수용 향상 서비스로 구분(보건산업진흥원 등)

- 특히, 건강모니터링·웰니스(웨어러블, 디지털헬스케어), 주거·일상생활(스마트 홈케어, 가사로봇), 돌봄기술(돌봄로봇)이 Age-Tech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구분	지원영역	주요기술
고령자자립생활기술 (AIP Age-Tech)	건강모니터링·웰니스	생체신호모니터링, 웨어러블디바이스 등
	안전관리·응급대응	낙상감지시스템, 응급호출서비스 등
	사회적연결·의사소통	터치스크린, 자동메신저 등
	주거·일상생활	가사로봇,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등
	이동·교통	네비게이션, 전동스쿠터 등
	교육·여가	인지훈련·두뇌건강앱, VR/AR 학습콘텐츠 등
	금융·경제활동	사기방지시스템, 연금·자산관리플랫폼 등
	맞춤형·개인화	시비서,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령자돌봄기술 (Care Age-Tech)	돌봄제공자 부담경감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보조기기, 돌봄 로봇 등
고령자기술수용서비스	고령자기술수용도향상	디지털리터러시교육 등

4 세부추진과제

❖ 5大 중점 Age-Tech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 (R&D 투자 확대) 현재 연간 약 3,900억원 수준으로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가칭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 현재 추진 중인 5대 Age-Tech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 R&D의 연 평균 투자액은 약 3,909.7억원으로 추정('25년도 R&D 투자액 29조 6천억원의 1.3% 수준)

- 새롭게 개발되는 5大 중점 Age-Tech 분야의 기술이 정부 지원(예: 기술특례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50대 세부 중점기술)에 지속 포함

< 12대 국가전략기술 제도 관련 내용 >

- ▶ (포함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기술, 수소 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체계, 인공지능 기술, 차세대 통신망, 첨단 로봇 및 제조 기술, 그리고 양자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
- ▶ (지원 사항)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통한 국가 R&D 참여 기업 매칭부담비율 완화 및 국가전략기술 보유확인 기업 대상 초격차 기술특례 등 지원

❖ 대규모 Flagship Project 추진

○ 글로벌 Age-Tech 유망 기술·제품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대규모 Flagship R&D Project 기획 추진

* 기술개발 → 상용화 → 해외진출 등을 통합적 지원

① (고령친화산업 고도화)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하여 에이지테크(Age-Tech)로 고도화하는 '가칭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기획과 더불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있음(범부처)

② (한국형 ARPA-H 복지·돌봄 과제 발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중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분야 과제 지속 발굴*(복지부, 1,800억원)

* (예시과제) 역노화 기술개발 돌봄로봇 대중화 기술개발 스마트 홈케어 고독사 예측시스템 개발 등

❖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① (Age-Tech 기업육성 펀드 확대) 민관협력을 통해 5대 중점 Age-Tech에 대한 투자마중물을 강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등을 활성화(중기부, 복지부)

*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운용사가 결성한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펀드

- 생명공학 분야에서 노년 관련 질환 및 재생 의료와 같은 핵심 영역의 초기 연구 단계 (예: 임상 진입 이전 시점 등)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25, 500억원 내외)
- 시장 환경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에이지테크(Age-Tech) 분야 등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를 지속 운영(現 215억원 조성)

* 지원 조건 :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중소·벤처기업 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우수사례 >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제1호 투자처는 (주)큐라코(10억원)로 투자금은 배설케어로봇 생산 기반 확충(인프라), 국내 보급 및 확산 관련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 정착 및 해외 진출 확대 중

②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현행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를* Age-Tech 등 기술융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복지부)

* 현재 보행자, 지팡이,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품목 위주 운영 중, 고령자 수요 변화 등으로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현재 36개 제품)

- Age-Tech 전용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컨설팅 제공(안전성·기능성·편의성 등 사용성평가 개선사항 확인, 제공 등)
- 고령친화우수제품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공공·민간의 복지물 탑재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연계 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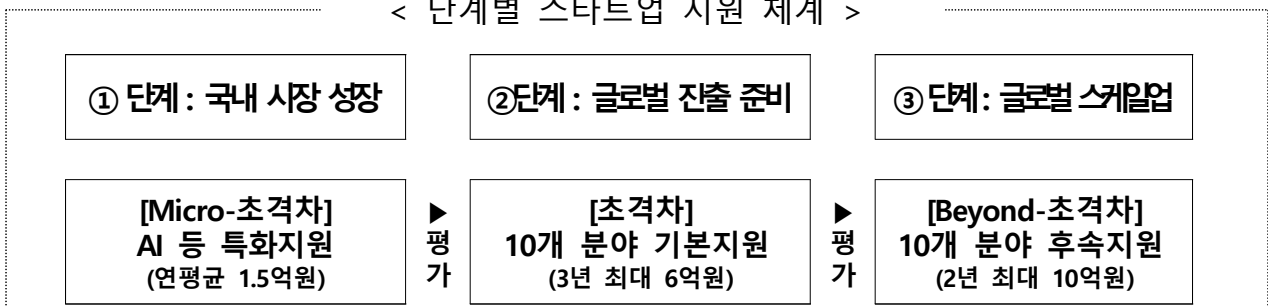
③ (스타트업 발전단계별 지원) 5대 중점 Age-Tech 분야 스타트업의 발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단계별 지원(중기부, '25년 1,127억원)

- (국내시장 진입 지원) Age-Tech 스타트업에 3년간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비용 및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비용을 지원(기본지원)
- (글로벌 진출 지원) 기본지원 대상 Age-Tech 스타트업 중 매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스케일업 비용을 추가 지원
- (후속투자 연계 지원) Age-Tech 스타트업을 위한 ^{가칭}초격차 Venture Capital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 증권사를 통한 IPO* 지원 등 원활한 후속투자 연계를 지원

* (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상장하는 절차

- (해외투자 유치 지원) Age-Tech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글로벌 투자자에 소개하는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K-Global Star IR'을 추진('25년 미국)

< 단계별 스타트업 지원 체계 >



④ (첨단전략산업기금 활용 추진)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원 규모, 산업은행)'내 포함된 재생의료·항노화 등 바이오, 돌봄로봇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Age-Tech 산업 육성 기반 강화(금융위)

<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 >

- ▶ (목적)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 및 기술발전 지원
- ▶ (지원방식)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 글로벌 협력 강화

① **(국제협력 다각화)** 국내 Age-Tech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선진국과 기술교류 확대, 수출유망국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 글로벌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질병청 등)

-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와의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노인성질환 치료·재생의료 관련 R&D 등의 기술교류 추진

- **(영국)** 퇴행성 뇌질환 진단 및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한 한-영 前 임상/임상 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기술교류 추진('25~'27)

* (한) 한국뇌연구원 - (영) Dementias Platform UK(DPUK) 간 협력

- **(중국)** 중국 내에서 개최 예정인 로봇, 의료기기 전시회에 우리 기업 참여 등 분야별 쇼케이스 강화

*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25.6), 심천 의료기기 전시회('25.10) 등

- **(일본)** 실증, 보급 등 확산에 관심이 많은 돌봄로봇 관련 국제 전시회에 국내기업 참여 지원

< 국가간 Age-Tech 교류 사례(UK-Canada Age Tech Innovation Exchange) >

- ▶ (주관) 영국의 Innovate UK와 캐나다의 AGE-WELL, CAPHI이 공동주관
- ▶ (내용) 영국/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Age-Tech 관련 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양국 교류방문, 지원 프로그램 초청 등)

② **(APEC 활용)**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저출생·고령화(Age-Tech 육성 등) 등 인구변동 대응에 대한 APEC 내 논의 강화(외교부)

*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상 선언문(Leader's Declaration)에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의 공동대응 내용을 담은 부속서 채택 추진

< 2.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추진 >

□ 배 경

○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 경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24.3%로 전국 평균(18.4%)를 크게 상회하며, 2025년 26%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시도별 연령별 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2023)
- 특히, 의성군(43.8%), 군위군(43.1%), 청송군(41.2%) 등 도내 10개 이상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해당(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 생활전반의 구조적 대전환 필요

-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차원을 넘어 주거, 교통, 보건, 여가 등 생활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요구

○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전략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AFCGN)’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1,333개 도시가 가입(WHO)
- 경북도는 2023년 기준 WHO 네트워크에 공식 가입한 시군이 없으며,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경북형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 대두

□ 운영방안

○ 경북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 (구성) 고령친화도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노인복지 및 의료 시설 실무자, 담당 공무원,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내용) 경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기획·집행·평가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 (운영) 공청회 및 세미나, 포럼 등 개최를 통한 일반 도민들의 논의의 장(場)으로 운영

- 거버넌스 기반 협력 구조 : 행정 주도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협력 구조 형성, 민간단체, 시설 운영자, 노인 당사자의 참여, 교통, 문화,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경북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 경북의 도시환경에 대한 고령친화도 진단

- WTO 기준 3개분야,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에 기반한 진단 실시
 -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산업, 도시계획, 교통, 주거, 환경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노인친화성 진단 실시
-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 즉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건축, 경관, 도로, 공공시설 등의 상호 연계성이 노인친화도 진단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됨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가칭) 「경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내용)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실행기구 설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 전략적 로드맵 수립

- 고령친화도시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 및 교통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준비부터 계획, 실행, 평가 까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
- 고령친화도시는 점진적·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며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통한 과업 추진 필요
 - (단기) 고령친화도 진단 및 조례제정, 시범지역 선정
 - (중기) 기반 인프라 정비 및 에이지 테크 실증사업 도입
 - (장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정회원 가입 추진 및 확산

□ 고령친화도시 육성방향

○ 경북형 고령친화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경북형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22개 시군 대상 노인친화 진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서, 점검표 마련

- 정책연구 및 타당성 검토: 「경북도 고령친화도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선행 실시
- 연구조사를 통하여 경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과 장애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개발
- 경북도 22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친화 지역사회 모델 개발 필요
- 노인친화 지역사회 모델은 새로운 노인문화와 시군의 독특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도시 개발 정책을 포함

○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4대 영역 ①물리적 환경개선, ②건강 및 돌봄체계 구축, ③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④협력체계 강화로 구분 조성

①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물리적 ·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주거환경 개선 : 주택 개조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고령친화공원, 녹지조성 및 공공시설 리모델링
- 생활인프라 개선 : 보도·횡단보도·조명 등 보행환경 정비, 노인전용도로 및 전동휠체어 인프라 확충, 노인 대상의 특별 이동서비스 도입 검토
- 스마트홈 도입 : 센서기반 안전관리, 원격 모니터링, AI 기반 안부 확인 등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

② 건강 및 돌봄 체계 구축

- 지역기반 건강지원 강화 : 보건소 중심 건강검진, 상담,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 커뮤니티 기반 운동 프로그램, 노인스포츠 바우처 및 관련 정보 제공
- 노인 돌봄서비스확대 : 장기요양 외 다양한 비형식 돌봄서비스 및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내 건강 관련 정보 제고 및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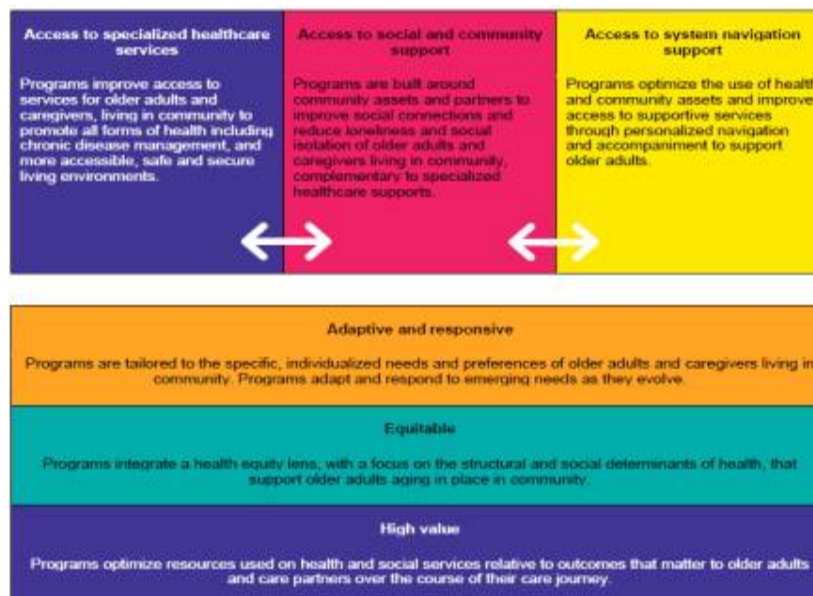
③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자원 봉사 연계, 노인주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포용 정책 :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 기기 보급 및 사용 지원, AI·IoT 기반 생활 밀착 서비스 지원
- 지역 공동체 중심 모델 개발 : NORC(자연발생 은퇴공동체) 벤치 마킹하여 지역형 복지모델 구축

【 캐나다 】

❖ UHN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Innovation Centre

- 저소득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자연은퇴노인 주거공동체(NORC)로 지정
- 커뮤니티 기반의 복지·의료·생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고령친화 주거단지
- (Age Tech 적용) 센서 기반 스마트홈, 원격 건강 모니터링, AI 안부확인 서비스 등 에이지테크가 결합해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 관리
- (Connected Care Hub) :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 결합시켜 낙상·활동·약 복용 등 실시간 감지 및 응급대응
- (통합생활서비스제공) 건강상담, 웰니스, 컴퓨터 교육, 평생교육 워크숍 등 제공
- (사회적 가치)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과 고독사 고립 예방,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자 스스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역량을 강화



(UHN NORC Innovation Centre (2023))

④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친화도시」 참여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환경 기준을 제공
- WHO는 도시환경, 건강, 사회참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개 영역(주거,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과 84개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친화 정책 설계에 핵심 지표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2013), 부산(2024) 등이 WHO 네트워크에 가입해 조례 제정, 고령친화영향평가 도입, 전담부서 운영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경북도는 이들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WHO 기준을 반영해 국제 인증 추진
- WHO 가입은 단순한 외형적 참여가 아닌, 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정책 네트워크 진입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함

□ 세부추진방향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형 주거모델

○ 스마트 에코-하우징 플랫폼 도입

-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 및 AI 스마트 관리 시스템 결합
 - 제로에너지 하우징 설계: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을 적용해 주택 에너지 자립률 100% 실현
 - AI 기반 실시간 주거환경 제어: 인공지능이 거주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조명·온습도·공기질 등을 자동 최적화
- 맞춤형 건강 안전 연동 시스템 내장
 - 스마트 센서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심박수, 걸음 수, 수면 패턴 등 헬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즉시 알림

- 낙상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움직임 분석 센서로 낙상·위험 행동 실시간 인식 → 자동으로 119·가족·사회복지사에 전송
- 원격 진료 및 약 복용 관리 시스템 연동: 스마트폰 또는 음성 인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예약, 복약시간 알림 자동 제공
- 고령자 친화 스마트홈 표준을 만들어 도내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산
 - 지역 맞춤형 모듈화 설계 도입: 도심형(고층)과 농촌형(단독주택)에 따라 맞춤형 스마트 에코 하우스 모듈 설계
 - 스마트홈 인증 제도 및 시범단지 조성: ‘경북형 고령자 스마트홈 인증’을 도입하여 기술·서비스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각 시군에 시범단지 조성
 - 민관연계 R&D 플랫폼 구축: 도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해 기술 실증 및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 고령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이동 생태계 구축

○ 디지털 노인 모빌리티 네트워크 조성

- 전동휠체어·보행 약자 전용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 전동휠체어 전용 스마트 트랙 전면 도입: 기존 인도와 분리된 전용 트랙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 충격 완화 바닥재 및 탄성포장 도입, 야간 조명 및 실시간 경로 유도 시스템 탑재
 - 트랙 내 위치센서·AI CCTV를 통해 낙상, 충돌 등 위급상황 자동 인지 및 신고
-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 보행속도 감지 센서를 기반으로, 고령자 통과 시 자동으로 신호 시간 연장
 - 전동휠체어 접근 시 신호 자동 감지 및 음성 안내 지원 (다국어·시각장애 겸용)

- QR코드 기반 실시간 이동 서비스로 노인 맞춤형 대중교통 예약/연결
 - 고령자 전용 앱 또는 카드로 QR 인증 → 마을버스, 셔틀, 전동차 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 연동
 - 실시간 대중교통 도착 정보 제공 및 자동 경로 추천 (음성 안내 기능 탑재)
- 경북 농촌형 지자체와 연계 가능한 초소형 모빌리티 공유사업 시범 도입
 - 농촌·산간지역을 위한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간편 조작 및 음성 안내 기능 탑재
 - 지정 거점에서 QR 체크인 후 간편 대여 및 반납 가능 (요금 무료 또는 저렴하게 설정)

❖ **고령자 건강·생활·심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보건소,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주민센터를 연결한 지역기반 원격 의료 네트워크
 - 기관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 노인의 건강 기록, 약물복용, 운동습관 등을 통합 모니터링해 맞춤형 지원
- 웨어러블·IoT 연동 고령자 건강기록 통합 대시보드
 - 혈압, 심박수, 수면, 걸음 수, 식사 내용, 복약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자동 수집
 - 고령자 친화 모바일·태블릿·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확인 가능
- AI 기반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시스템 운영
 - 의료·운동·영양·심리상담 전문가가 협업하는 AI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시스템 운영
- 고립 예방과 심리·사회적 돌봄 기능 확대
 - AI 정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언어패턴, 표정, 생활패턴 분석을 통해 우울감 무기력 등 위험 감지하여 필요시 심리상담사 등과 연계
- 데이터 기반 사례관리 자동화
 -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홈 센서 등으로 수집후 이상징후 패턴을 분석후 고위험군 자동식별 → 보건소, 복지기관, 가족들에게 연락

- 경북형 스마트 돌봄 플랫폼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
 - 22개 시군의 여건에 맞춰 확장 가능한 표준모델 설계
 - 공공기관, 민간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돌봄 R&D·실증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 소외 최소화를 위한 교육·기기 보급 병행

❖ **고령자 재능과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 실버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 지역 노인을 유튜버, 팟캐스트 진행자 등으로 육성하는 노인 디지털 셀럽 프로젝트
 - 지역 복지관·도서관 등에 전용 스튜디오, 편집 장비, 콘텐츠 교육 공간 마련
 - AI 영상편집, 음성더빙, 시니어 특화 자막 제작 툴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키트 제공
- 노인 주도형 로컬마켓 & 공유경제 플랫폼
 - ‘고령자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 생산물, 수공예품, 재능기반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니어 마켓’ 구축
 - 제품 생산부터 포장·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공동 운영하여 고령자의 사회적 연대 강화
 - 온라인 판매 연계, 지역화폐 시스템 접목 → 경제활동 + 사회참여 + 세대융합 달성
- 시니어 소셜 벤처 및 리빙랩 운영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주도형 비즈니스 실험 → 공유 텃밭, 전통기술 전수 등
 - 청년·마을기업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중심 리빙랩을 통해 정책 수요 도출을 통해 행정과 정책화 연계

❖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도모**

- WHO-경북 공동연구 및 국제 인증 맞춤 로드맵
 - 서울·수원, 캐나다, 일본 등 선진 고령친화도시와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 다국어 기반 글로벌 플랫폼 운영하고 해외 고령친화 전문가 초청하여 현장 평가 및 제안 정책 반영
 - 장기적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지역 앵커 기관’ 유치 추진

< 3.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 >

□ 배 경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식생활 문제

-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식사 관련 문제(소화능력 저하, 만성질환에 따른 식이 제한 등) 발생
- 이는,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할수 있는 맞춤형 식품 개발 필요

○ 고령자 니즈를 반영한 식품개발 필요성

- 고령자는 일반식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식품의 점도, 나트륨 함량, 단백질 등 맞춤형 영양설계 필요. 이것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 뿐만 아니라 노후 의료비 절감에 기여
- 고령친화식품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별 맞춤화 설계가 중요한 산업으로 대기업보다 유연하고 전문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유리

○ 시니어푸드 산업 성장 전망

-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들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고령친화식품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 역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음
- 데일리한국(2017)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8%(5,104억원 →7,903억원) 증가하였으며 향후 1조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

※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고령친화식품 개발 사례

- ▶ (주)사랑과 선행 : 연화식 도시락 제품 개발, 혈당조절 및 근력개설,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 입증.(서울경제, 2021.)
- ▶ CJ프레시웨이 -헬씨누리 : 연화식 덮밥, 반찬류 개발하여 한국 식품연구원 KS 인증,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 획득(뉴데일리경제, 2022.)
- ▶ (주)푸른가족농업회사법인, (주)더비 : 고령친화식품 KS 인증제품 개발하여 요양기관에 납품(서울경제, 2024.)

○ 시사점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 주도로 KS 고령친화식품 인증(KS H 4897)제도를 마련하여 제품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 현재까지는 의료기기·용품 중심의 고령자용품 시장은 활발하나 식품 부문은 정책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인증·유통 인프라, 수요 연계 돌봄체계 마련 등이 필요

□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방안

○ 고령친화식품 법·제도 정비 및 육성 기반 강화

- 현재 고령친화식품과 관련된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한계점 존재

법 제도	내 용	한계점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 육성 기본 법률	'용품·서비스' 중심, 식품에 대한 직접적 규정 부재
KS H 4897 (농식품부)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자율 표준 제정	임의표시제, 강제성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식약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관리	고령자 특화 기준, 연하장애 등 기능 약화 고려 부족

○ 제도기반 강화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KS 표준(KS H 4897)을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관련 식품규격이 마련하고 있음. KS표준은 임의표시제로 운영되어 기존 식품규격과 공존이 가능하며 이를 적용한 제품은 고령친화식품으로 차별화할 수 있음
- 그러나, KS 인증은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고, 실제 인증을 받은 기업수도 적은 상황임.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현장 활동도는 낮은 수준.

○ 중소기업 맞춤형 R&D 및 생산·유통 지원 강화

- 고령친화식품산업은 다품종·소량생산의 특성상 유연한 생산과 유통체계가 필요한 산업으로,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에 적합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가산점 부여 및 R&D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 시급

○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전문성 확보, 산업육성 기반 조성, 정책현장간 연계강화를 위해 통합 커뮤니케이션 조직 필요
- 고령친화식품은 복지(보건복지부), 농식품산업(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식약처), 중소기업 육성(중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융합산업 분야이므로 부처간 협의 창구가 필요

○ 통계 및 관련 정보의 확충

- 고령친화식품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부족,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중 50.0%는 자체 연구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 간행물(31.3%)보다 높은 수치로, 공공 데이터의 활용도가 낮음을 보여줌
- 현재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한 정부 및 기관 통계 자료 중에서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이고 독보적인 자료원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정보 마저도 일반식품 산업 통계를 고령자 인구비로 단순히 환산하여 산업실태 반영이 부족한 실정

○ 고령친화식품 홍보전략 전환

-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조기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념확산이 필요
- 현재 노인용(고령자용) 식품이라는 명칭과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소비와 시장확대에 심리적 장벽 작용
- 또한 현재 사용중인 ‘고령친화식품’이라는 명칭 또한 노쇠, 퇴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산업성장에 저해가 될수 있음.

※ 일본 사례의 경우

- UDF(Universal Design Food): 모든 사람이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포괄성과 접근성 중심 명칭
- Smile Care Diet: 고령자 식사를 즐겁고 긍정적인 생활의 일부로 표현하는 전략

○ R&D 측면에서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 고령자를 위한 식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심리적 만족감과 식사의 즐거움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일본은 고령친화식품 개발시 음식의 원재료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경도 점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중
 -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음식이 맛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먹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연하장애(삼키는 기능 저하), 저작능력 약화, 식욕 감퇴 등을 고려한 기술적 대응(겔화, 폼화 기술 활용)이 필요
 - 오랫동안 형성된 고령자의 식습관과 음식 선호도를 존중하여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
 - 또한 지역사회돌봄체계와 연계한 서비스화 전략 병행 필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연계하여 식품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하는 제도

□ 세부추진방향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친화식품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품목, 표준기준, 생산유통 기준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 고령친화 식품표시 인증제 도입 : 안전성, 영양성, 식감 등을 통합 평가한 인증 마크 부여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생산·유통·표준 기준 수립 : 식품의 원재료, 가공방법, 물성기준에 관련 국가표준(KS) 제정 및 제조 판매업체의 품질위생관리 의무화 등
- 고령친화식품 기술 개발(R&D) 및 산업 지원 : 기능성 원료, 특화 조리법 등 R&D 지원 확대

- 공공복지시설 연계 및 공공조달 확대
 - 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고령친화식품 우선공급 체계 마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화
-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고령친화식품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조리사·영양사 대상 고령자 식생활 교육 인증제 도입
 - 경상북도 고령친화식품 산업지원센터설치 근거 마련
 - 제품 개발, 품질검사, 수출지원 등 통합지원 제공
 -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중앙정부 주도의 기본계획(5년) 수립 및 시행

❖ **고령친화식품 전담 조직 설립 및 운영**

- **고령친화식품협회(가칭) : 고령친화식품 전문 민간조직**
 - (목적)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회원사 간 교류 촉진, 소비자 인식 확산, 국가 정책과 시장 요구를 연결하는 대표 민간 플랫폼
 - (기능) 정책 소통 창구 역할, KS 인증 기준, R&D 방향 등에 대한 기업 수요 조사 및 전달, 업계·학계·유관기관과 협력한 세미나, 워크숍, 공동 R&D 매칭, 소비자 대상 홍보·전시·체험사업 운영
- **고령친화식품위원회(가칭) : 민관정 통합 거버넌스 기구**
 - (목적)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식품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산업·복지·의료영양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조율 및 자문기구
 - (기능)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
 - 복지부(급식/요양), 식약처(식품기준), 농식품부(생산), 중기부(지원정책)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관련 정책 통합조정
 - 고령자 식생활·영양 정책에 대한 전문 검토 및 권고
 -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 과정 협력 및 자문 역할

❖ 고령친화식품 산업 통계 체계 구축

○ 통합형 고령친화식품 산업통계 체계 구축 필요성

- 현재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 정보, 시장 규모, 소비자 특성, 그리고 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실증 기반 없는 정책 수립의 한계 → 과학적 정책 기획, 예산 배분, 기업 지원의 정합성 부족
- 「산업 실태 + 소비자 수요 + 품질 만족도」를 반영한 전주기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 산업실태 반영한 실측 기반 통계 체계 구축 필요

- 고령층의 식생활 유형, 연하 장애 유무, 선호하는 제품군 등 실제 행태에 기반한 조사를 수행
- 각 기업의 생산 품목, 제품 인증 현황, 유통 경로,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산업 현장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함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항목 신설 및 주기적 조사 체계화(고령자 식품소비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KS 인증 통계, 식품 유통 실적 등 산업데이터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경쟁력 분석 등
- (고령친화식품산업협회 설립) 민간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산업 통계(기업, 인증, 품목, 유통) + 소비자 수요 통계(고령자 조사) + 품질 통계(만족도, 반품율 등)
- 고령친화식품 인증 기업 전용 대시보드 제공 → 기업별 시장 분석, 소비 트렌드 추이 제공

❖ **고령친화식품 KS 인증 확대 및 참여기업 육성**

- **KS 인증 대상 품목 확대** : 연화식 외에도 고령자 맞춤형 식품군 전체로 범위 확대 필요
 - 기능성 간편식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맞춤 영양식
 - 영양보충식 : 단백질 강화, 면역력 향상 등을 위한 영양식
 - 고령자용 음료 디저트 : 설탕 첨가를 최소화하고, 삼키기 쉬운 점도를 지닌 식품
 - 인지건강 및 정신건강 식품 : 오메가-3와 같은 두뇌 건강 성분을 함유한 제품군으로, 영양 보충식, 음료, 디저트 등이 포함됨
- **KS 인증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R&D 자금 연계 지원 : 기능성 원료개발,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등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가점
 - 공공기관 급식 납품 우선권 부여 :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병원 등 공공 급식 조달 시 KS 인증 제품 우선 공급 대상화
 - 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원 : 정부 인증 로고 부착, TV · 유튜브 · 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공동 광고 캠페인 추진
- **산업단체와의 협력 생태계 조성**
 - 한국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 정기적인 정책 설명회 · 기술 세미나 개최, 사례 공유 및 공동마케팅 협업
 - 기업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피드백 채널 구축
온라인 설문, 오픈 포럼,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 지속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필요

❖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생산·유통 통합지원

○ 식품기술 R&D 집중투자

- 고령자 연하장애 대응 식품경도 조절 기술, 만성질환 대응 저염·고단백 영양 설계, 기능성 원료 개발 등 실용 R&D에 집중
- 현장 맞춤형 R&D 플랫폼 운영
 - 지역 식품기업, 대학, 병원, 영양사협회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식품 실증랩” 설립
 - 개발된 기술은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실사용처에서 실증 → 즉시 피드백 및 고도화

○ 위탁생산 공동화 시스템 확대

- 자체 제조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민간 가공센터 연계 플랫폼 구축
- 지역 농산물-공동가공-표준포장까지 연계한 일괄형 제조지원 체계 도입
- 지자체 유희시설(도서관, 복지관 등)을 활용한 「시니어푸드팩토리」 모델 시범 운영

○ 유통망 공동화 및 공공급식 연계 전략

- 복지기관 대상 B2B 공급 체계 강화
 -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 고령친화식품 전용 카탈로그 도입
 - 국가가 인증한 ‘우수 고령자식단 모델’을 개발하여 기관별 정기 공급 계약 체결
- 지자체 연계 도시락·급식 사업 통합
 -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사업에 고령친화식품 포함 → 지역화폐 결제 및 식생활 모니터링 연계
 - 장기요양보험 연계 식사 제공 서비스에 인증 고령식품 납품 의무화 제도 검토

○ 재정 세제 인센티브 지원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고령친화식품 인증기업 가산점 부여
- KS 인증·고령식 R&D 참여 기업 대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전기·수도요금 감면, 고용창출 인센티브 제공
- 지역 식품기업을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연계한 고령친화식품 사업 보증지원제도 도입

❖ 고령친화식품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수용성 확산

○ 국가 주도 대국민 캠페인 전개

- (가칭) 에이지 플러스 (Age Plus), 해피 에이징 캠페인 (Happy Aging), 세컨드 라이프 디자인(Second Life Design) 프로젝트 등과 같은 전국 단위 캠페인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 고령친화식품이 노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식품이라는 메시지 전달

○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인식 변화 유도

- “고령친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는 인식 확산, “약한 이미지” 가 아닌 “건강한 선택” 으로 브랜딩
- 셀럽 모델, 실버 인플루언서, 가족 중심 광고 등을 통한 인식 변화 유도
- 일반 식품과 동일한 디자인, 패키지, 구매 환경 제공을 통해 차별 아닌 통합적 소비 경험 조성

○ 고령친화식품산업의 공공성 강조 및 현장중심 홍보 강화

- 고령친화식품은 단순한 상업적 제품이 아닌,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성격을 강조
- 이를 통해 정책·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가능
- 병원, 노인복지시설, 요양기관, 재택 돌봄이용자 등 실제 수요처 대상 홍보 확대

- 지역 보건소, 시·군·구 노인복지관, 방문간호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리플릿, 시식 행사, 체험형 교육 홍보 추진
- 시니어 맞춤 레시피북 발간 및 보급 등 식문화로 내재화 하기 위한 장기적 확산 전략

< 4. 시니어 치매 예방 및 관리 산업 육성 >

□ 배 경

- 치매유병률 증가 및 지역편차 심화
 - 경상북도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10%로, 전국 평균(약 8%)를 상회하며, 초고령 사회진입과 더불어 더욱 증가 추세(「중앙치매센터 지역별 치매현황 통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21))
 - 국회입법조사처(2022) 「고령자 지역간 의료접근성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북부 및 농촌지역의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 접근성이 낮아 치매 진행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비율이 높은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
-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73만 원으로, 의료비 외에도 간병·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용이 매우 크며, 국가 전체 부담은 연간 약 16조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보고서, 「치매환자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2021)」)
 -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전담할 경우, 직장 포기, 돌봄 우울증, 가족 해체 등의 이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 조기발견 및 산업기반 시스템 미비
 - 현재 경북 내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 중심의 진단 체계는 운영 중이나, 디지털 기반 조기 선별 시스템, 인지저하 예방 훈련 콘텐츠 등은 매우 제한적
 - 치매 관리 관련 산업은 현재 의료 및 영양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민간이 개발 중인 인지훈련 콘텐츠, 모니터링 기술, 예측 AI 솔루션 등은 제도적 실증 및 도입 기반 부족

□ 치매예방 및 관리산업 육성방안

○ 정책 및 제도 기반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치매 코디네이터, 인지훈련 전문가, 커뮤니티 간호사 등 직무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 대학, 보건소, 요양기관과 협력한 현장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제4차, 2021~2025)과 연계한 지방정부 수준의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 경상북도 치매관리기금 조성 및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인지훈련, 건강체조, 치매이해 등)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공공시설 및 주거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술 기반 치매 관리 시스템 도입

- 통합 ICT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 위치추적, 복약 알림, 화상상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
 - 실시간 가족 연동 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태를 원격 공유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앱 개발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인지훈련 게임, 생활 건강 기록, 알림 기능을 포함한 앱 개발
 - 고령자 대상 디지털 교육 및 기기 지원 정책 병행 (태블릿 지원, 사용법 교육 등)
 -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민간 참여 확대

- Age-Tech 연계 산업 육성

- 치매 예방·관리 기술 관련 스타트업, 의료기기 제조사, 콘텐츠 개발 기업 유치
- 지역 내 창업지원센터 및 테크노파크 연계 지원
- R&D→실증→보급 단계로 이어지는 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발굴, 주민 참여형 마을돌봄 공동체 조성

□ 세부추진방향

❖ 치매 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정책

○ 치매 가족 전문가제도 도입

- (대상) 장기 간병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 “경험 기반 치매 서포터” 로 활동
- (내용) 정서적 지지, 동료 가족 상담, 간병 기술 전수 등의 영역에서 활용

○ 농촌형 마을 간병인 제도 도입

- (대상) 중장년층(은퇴자, 귀농인 등)을 치매 생활보조전문가로 교육하여 채용
- (내용) 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방문형 예방교육·운동 지도·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농촌지역 돌봄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 치매 전문인력 ‘마을배치형 순환제’ 도입

- (대상) 지역 내 치매 코디네이터, 인지치료사, 간호사 등을 읍·면 단위로 배치하고 순환 근무 방식 도입
- (내용) 고정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 를 시스템화하여 가정방문 진단, 치료,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치매 예비전문가 청년트랙’ 신설 및 지역대학 연계

- (대상) 간호학과·사회복지학과 등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돌봄 현장 실습 강화
- (내용)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졸업 후 경북 내 요양시설, 공공센터에 의무 채용 연계, 경북도 차원의 치매돌봄인재육성 장학금 등 지원

○ 도내 대학과 연계한 ‘치매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 (대상) 청년 창업가와 의료·IT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내 치매 특화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가톨릭상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간호학과 등과 협업)
- (내용) 치매관련 의료기기, 스마트 돌봄, AI 관련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지역 기업, 병원, 연구소와 산학협력 구축, 경북도 청년창업자 대상 초기자금 지원(사무공간, R&D, 마케팅 등)

❖ 경북형 스마트 돌봄·치매 친화마을 도입

□ 스마트 돌봄 농촌마을 시범 조성

- 대상 : 농촌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군위, 의성, 영양, 청송 등지에 시범 운영
- 내용

〈 ICT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

- 위치 감지 및 이동 관리 시스템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 GPS 연동 스마트 팔찌 및 알림 시스템으로 위험상황 즉시 가족 통보
-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해 심박수, 체온, 활동량 등 실시간 체크
- 자동 복약 관리 기기 및 AI 스피커 연동 : 복약 시간 알림과 복약 기록 자동 저장, 음성 명령과 대화 기능을 통한 인지훈련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돌봄 체계 〉

- 디지털 + 공동체 연계 돌봄팀 구성
 - 마을 이장,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구성된 돌봄 네트워크 운영
 - 스마트 돌봄 앱으로 고령자의 상태와 돌봄 일정 실시간 공유 및 관리

〈 돌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참여 확대 〉

- 지역 청년을 ‘스마트 돌봄 매니저’ 로 양성하여 ICT 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고령자 일상 지원 역할 담당
- 청년-노인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운영(농촌 체험, 전통문화 배우기 등)

< 치매 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 >

- 1층 단독형 주택으로 재설계, 안전한 출입구·조명·손잡이 설치, 생활 동선 최소화, 방마다 명확한 색상과 아이콘으로 방향 안내
- 치매 친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마을회관 또는 폐교를 활용한 인지훈련센터, 커뮤니티홀,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 일상 중심의 자립 생활 지원 :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농작업 등 고령자가 주도하는 일상 활동 프로그램

< 맞춤형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

- 치매 이해 및 대응 교육 : 주민 대상 치매 예방 및 돌봄 교육 정기 실시
- 디지털 문해력 교육 : 고령자 대상 AI 스피커, 웨어러블 기기 등 사용법 교육, 지역 주민 및 돌봄 인력 대상 스마트 돌봄 시스템 활용 훈련

【 캐나다 Dementia Village 】

- ❖ 마을 전체에 '치매 안심 환경'을 적용한 모델
- ❖ 2019년 개소한 캐나다(BC주) 최초의 치매 빌리지로, 75세대 1층 코티지(단층)형태로 구성
 - (사회적 혼합 커뮤니티) 카페, 미용실, 편의점, 예술목공 작업실, 커뮤니티홀 등 설치
 - (이동 안전 시스템) "wander management system" 센서 이용하여 울타리 근접 시 직원에게 자동 알람, 도랑 없는 곡선 산책로, 상징적 색상·아이콘 표지로 길 찾기 용이
 - (개인맞춤형 돌봄제공) 24시간 간호간병 제공, 상황별 일대인 케어 연계
 - (비(非) 병원화 중심) 병원이나 요양원 느낌이 아니라 일상에 기반한 삶을 목표로 직원들은 평상복 착용
 - (일상 자립 중심 케어) 고령자들이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주도적인 일상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이들의 행동 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크래킹 더 덤 인티아 코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가 워크숍을 운영함(Global News, Canada's first dementia village, 2023)

❖ 경상북도 치매예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포항, 구미 등 산업단지 중심)
 - 산업단지 내 에이지테크 특화 존 조성: 포항 철강산업단지, 구미 전자산업단지 내에 치매 예방 관련 기업 전용 공간 마련
 -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금,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지원: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연계해 초기기업 성장 촉진

○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 AI 기반 치매 조기에측 알고리즘 개발 및 앱 구축

- 경북대병원, 포항공대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 치매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는 AI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의료·건강 데이터, 생활 패턴, 가족력, 스트레스 지수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군 예측 및 개입 시점 제안
- 보건소·지역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AI 진단보조 시스템 탑재, 누구나 간편하게 치매 위험도 확인 가능
- 지속적 데이터 업데이트 및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증 사업 병행

- 포항가속기연구소 협력

- 고해상도 영상 및 방사선 기술 활용 치매 진단·예측 기술 연구 지원
- 바이오센서 및 나노기술 기반 치매 관련 웨어러블 기기 개발 협력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연계

- IoT 센서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AI 예측 앱과 연동하여 사용자 맞춤형 인지훈련 AR·VR 콘텐츠 기술 실증 및 사용자 행동 데이터 피드백 시스템 운영

○ 산업융합 및 서비스 고도화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개발 : 생체신호(심박, 체온, 움직임 등) 실시간 측정 및 이상징후 알림 기능 강화
- 인지훈련 콘텐츠 다양화 및 맞춤형 개발 : 치매 초기 환자 및 고위험군 맞춤형 게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 위치추적, 낙상감지, 비상호출 등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에이지테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연구·개발·사업화 전 단계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제공
- 치매 예방 관련 전문 인력(기술자, 상담사, 코디네이터 등)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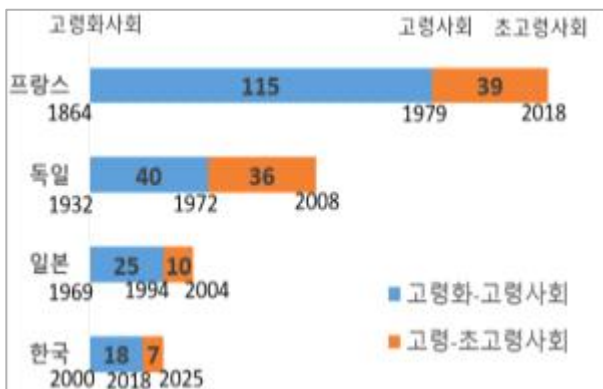
VIII. 결 론

□ 고령화 추세

① 초고령사회 진입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 사회 진입 25년 만에, 그리고 고령 사회 진입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함
 - * 통계청 인구총조사기반 추계(7.1기준 연앙인구) 기준으로는 '25년 고령인구 비중 20% 초과
-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1%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37.3%로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 자료: 통계청

고령인구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② 국내외 불문, 고령인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전 세계) 글로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년 10.2% → '50년 16.3% → '72년 20.3%로 지속 증가하여 유소년 인구 추월 전망
- (우리나라) '24.12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50년에는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며, '72년에는 47.7% 전망



* 자료: 통계청

③ 기술 수용성 및 대외활동 욕구가 높은 액티브 시니어가 시장에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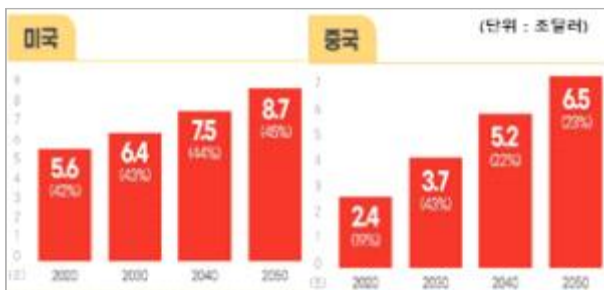
- '2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인구의 약 20%인 약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64~'7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고, 대외활동 욕구가 높아 실버경제의 발전양상이 기존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 비교

구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경제력	• 독립적인 부유층이 얇음	• 독립적인 부유층이 두터움
노년의식	• 인생의 황혼기, 위기	• 새로운 인생 시작, 기회
가치관	• 본인을 노인층으로 인식	• 본인이 젊다고 생각
레저관	• 일 중심적이고 여가 활동이 없음	• 여가 자체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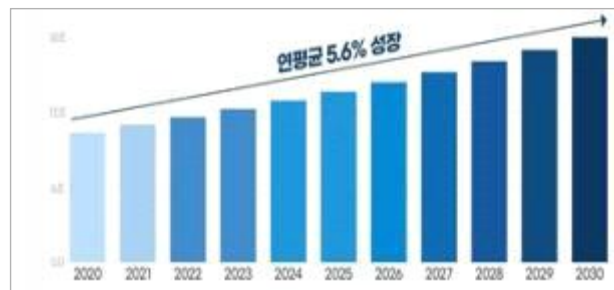
- (자산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순 자산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지출수준) 전 세계 고령 인구의 지출 규모(실버 경제)는 2020년 8조 7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15조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중국 고령층 자산 전망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고령인구 지출액 전망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결 론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은 기술·소비 측면에서 변화된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고령층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
 - 이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고령층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면서, 기술을 접목한 돌봄 서비스, 건강 기능 식품, 지역 기반의 생활 환경 개선 등 개별화된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런 흐름은 지역 사업체들이 고령층 친화적인 상품과 용역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일 여건을 조성하며, 민간 부문의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은 단순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경제적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 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
-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기술 발전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경상북도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AGE-TECH 등을 필두로, 고령친화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함

< 참고자료 >

1. 고령친화산업 혁신발전방안 연구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대전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희대학교)
2.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여효성, 양원탁)
3. 고령친화산업 유망서비스 도출 및 고령친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
4.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시니어 사업 육성방안 보고서(스마트시니어산업연구소)
5.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성장 현황 및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산업연구원)
7. 고령화사회 에이지테크기술 및 정책현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 실버시장과 에이지테크(국회도서관)
9. Industry Research Institute (KDI). (2022). 김숙경, “빠르게 성장하는 에이지테크 시장…” *KDI Focus*.
10.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06). *Healthy aging in Canada: A new vision, a vital investment*.
11.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n.d.). *The Chief Public Health Officer's report on the state of public health in Canada*.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13. Age-Well NCE. (n.d.). *Age-Well network: Canada's technology and aging network*.
14. Health Canada. (2023). *Age-Friendly Communities Implementation Guide*
15. Hong, B. (2024). *Supporting aging in the right place in Canada with 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16. Grand View Research. (2024). *Canada home healthcare market outlook, 2025-2040*.
17. Statistics Canada. (2023). *Canadian Internet Use Survey, 2022*.
18.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2021). *Long-Term Care Homes in Canada*
19. NRC Canada. (2022). *Aging in Place Challenge Program*.
20. Government of Ontario. (2023). *Published plans and annual reports 2022-2023: Ministry of Safe Long-Term Care*
21. Canada Revenue Agency. (2023).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22.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2022). *Age-Friendly Communities in Canada: Community Implementation Guide*.
23.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2021). *How many long-term care beds are there in Canada?*
24. IBISWorld. (n.d.). *Home Care Providers in Canada - Industry Report*.
25. National Seniors Council. (2020). *Social Isolation of Seniors*
26.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2021). *Aging in Place Challenge Program*.
27. Government of Canada. CBC News.